

2018년 제2회 문화유산회복 정책토론회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현황과 과제

- 일시 | 2018. 4. 11.(수) 13: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18년 제2회 문화유산회복 정책토론회

■ 개 요

- 일 시: 2018. 4. 11.(수) 13:3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 제: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현황과 과제
- 주 최: 민주연구원
- 주 관: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재)문화유산회복재단

■ 진행순서

구분	시간	소요	주요 내용
사전 등록(13:00~13:30)			
1부: 사전행사(20분)		※ 진행사회: 정요실 기획실장 (재)문화유산회복재단	
개회	13:30~13:35	5'	◦ 개회선언/국민의례/내·외빈 소개
	13:35~13:45	10'	◦ 축 사: 이인영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전재수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13:45~13:50	5'	◦ 인사말: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포토타임 및 단상 정리 (5')			
2부: 발표 및 토론(60분)			
좌장	공 구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한양대 의대 교수)		
주제 발표	13:55~14:25	30'	◦ 주제1: 약탈 문화재 환수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경향 ◦ 발 표: 김경임 (재)문화유산회복재단 고문/전 튀니지 대사
			◦ 주제2: 문화유산 회복을 위한 제안 ◦ 발 표: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지정 토론	14:25~14:45	20'	◦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김동영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장 ◦ 주 경 불교사회연구소장 ◦ 김영관 (사)대한황실문화원 문화재환수위 연구위원
종합 토론	14:45~14:55	1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목 차

■ 축 사

- 이인영 국회의원 |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자문위원 1

■ 인사말

- 김민석 | 민주연구원 원장 2
- 이상근 |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3

■ 주제발표문

- 김경임 | (재)문화유산회복재단 고문/전 튀니지 대사 7
 - 약탈 문화재 환수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경향
- 이상근 |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19
 - 문화유산 회복을 위한 제안

■ 지정토론문

- 김예경 |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43
- 김동영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장 49
- 주 경 | 불교사회연구소장 51
 - 부석사 금동관음상 환수과정과 정부 대응의 문제점
- 김영관 | (사)대한황실문화원 문화재환수위 연구위원 57
 - 구황실재산법 개정의 타당성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인영입니다.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문화유산회복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뜻 깊은 토론회를 마련하신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상근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만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담은 문화재는 대한민국의 정신이자 뿌리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켜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세의 침략으로 약탈당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진 불법반출 문화재의 정확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2000년대 들어 문화재 환수가 국제적인 이슈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는 잃어버린 우리 역사를 되찾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렇기에 문화재 환수는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빼앗긴 우리 역사를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는 21세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공공외교를 주도할 수 있고, 국민주권을 확립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문화재는 그 자체로 한국의 정신이고 존재를 증명하는 역사입니다.

저 역시 불법적으로 반출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우리의 역사적 혼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재를 아끼고 보존하는 데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더욱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 영

인 사 말



원장 김민석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 원장 김민석입니다.

민주연구원은 작년 7월부터 ‘집단지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단지성센터’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내에서도 핵심역량이 모인 기관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아 국정에 반영하는 소통채널로 역할을 하려 합니다.

오늘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와 (재)문화유산회복재단이 공동주관으로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집단지성센터를 이끌어 주시는 이원욱 의원님과 공 구 집단지성센터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집단지성센터 각 분과를 맡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공동단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문화유산회복재단 김경임 고문님, 이상근 이사장님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패널로 참석해 주신 전문가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현황과 과제’입니다. 고려말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 불법 반출된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일본을 비롯하여 전세계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반출된 문화유산의 회복이 가지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역사, 민족의 얼과 혼이 깃들여 있는 문화유산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불법 반출된 문화유산 반환 현황을 통해서 나타난 정책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화유산들의 반환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각 주체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불법 반출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회복하는 것은 상처 입은 민족의 역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하고 남북 등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도 기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우리 조상들의 얼과 혼이 담긴 문화유산을 온전히 물려주는 위함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불법 반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회의 입법, 정부의 과제와 함께 민관협력 모델 그리고 남북 뿐만 아니라 공공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와 공조 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 사 말

고단한 일입니다. 지루하기조차 합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낯설기도 하며, 심지어 복잡하기도 합니다. 다들 좋은 일이라 하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면 멈칫, 머뭇거립니다. 하긴 약탈자들은 월등한 이익이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어떤 때는 인명의 살상까지 서슴지 않았습시다. 문화재 약탈자, 그들은 그 시절에 절대 강자(强者)로 군림하던 자들입니다. 이를 회복하는 일은 그들보다 더 힘이 세거나, 지혜가 높거나, 문명의 힘이 위대하거나, 누군가 죽을힘을 다해 매진해야 만이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절이 바야흐로, 문명이 시대가 열리고 문화의 위대한 힘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 과거청산의 화두 중에 하나는 ‘문화재 반환 즉 문화유산의 회복’ 이 역사의 정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날, 정복자들에 의해 약탈당한 역사와 문화, 공동체의 꿈을 되찾는 것은 피해자의 울분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더불어 민주당의 브레인 <민주연구원>과 함께 하여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각계각층에서 500여명의 지성들이 동참한 결정체가 <집단지성센터>입니다. 집단지성센터에는 문화유산의 회복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라 믿고 동참한 120여명, 문화의병들의 결사체 <문화유산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로써 상하 좌우, 수직과 수평이 활발히 작동하는 정책집단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으니 ‘**깊**이와 **넓**이’ 를 두루 갖춘 곳이 민주연구원입니다.

고단하고, 지루하고 낯설고, 복잡한 활동도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될 수 있게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김민석 원장님과 민주연구원님들, 당근과 채찍으로 갈피를 잡아주시는 공 구 센터장님과 각 위원회님들, 망설이고 주저하는 토론회에 끈을 잡아채고 달려오신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님, 고영국 연구위원님 그리고 문화유산회복재단의 정요실 실장님과 최나래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이상근

주·제·발·표

1. 김경임 (재)문화유산회복재단 고문/전 튀니지 대사

- 약탈 문화재 환수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경향

2.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 문화유산 회복을 위한 제안

문화재 환수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경향

김경임 (재)문화유산회복재단 고문/전 튀니지 대사

문화재 환수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지도 반세기가 넘어갔다. 제2차 대전 종전 후 제국주의와 식민통치로 인한 왜곡된 역사의 복원과 문화적 빈곤을 회복하기 위해 신생국들에 의해 전개된 문화재 반환운동은 냉전을 맞은 국제사회의 무관심으로 성과 없이 수면 하에서 잠복해 오며 훗날의 해법을 기다려 왔다.

1960년 유엔총회는 식민통치의 불법성을 확인했지만 유엔은 그 불법의 과실인 식민통치 하에서 약탈된 문화재의 반환문제는 과거 식민종주국들의 냉담한 반응에 부딪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대신 유네스코에 적극적 조치를 위임했다. 1962년부터 유네스코는 각국 정부대표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1970년 문화재 반환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을 성립시켰다. 이것이 “문화재의 불법 수출 및 수입과 소유권 양도의 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1970. 유네스코 협약(1970 UNESCO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이다.

이 유네스코 협약은 국제사회에서 선후진국들이 다수 참여한(1970. 채택 시 거수투표, 77개국 참가, 1국 반대, 8국 기권) 약탈문화재 반환의 획기적인 국제협약으로 선전되며 약탈 문화재 반환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일부 선후진국들 간의 타협의 산물로서 약탈 문화재 반환과는 거리가 멀다. 우선 이 협약은 1970년 이후에 일어난 도난, 도굴된 불법문화재의 반환을 다루는데, 주로 부유한 선진국에서 도난된 문화재와 유적지가 많은 후진국에서 도굴된 문화재의 회복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도난, 도굴 문화재는 대부분 개인의 범죄행위에 의한 것이며, 1970년 이전의 제국주의 또는 식민통치 기간 중 공권력에 의해 약탈된 문화재 회복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 이 협약에서 문화재 반환을 규정하는 핵심조항인 제7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 (a) 본 협약이 관계국가에서 발효된 이후에 그 국가 영역내의 박물관 및 그 유사 기관이 타 당사국으로부터 출처되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취득을 방지 하도록 국내입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b)(ii) 회수 및 반환 요청은 외교관청을 통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회수 및 반환청구를 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 및 기타 증거” 를 자국의 경비부담으로 제출해야 한다. (따옴표는 필자)

이러한 규정은 결국 도난 도굴되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 청구국(피해국)이 입증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반출”에 대한 불법성과 이의 증빙에 관한 각국의 법 규정이 상이하여 실효성이 크게 제한된다.

따라서 이 협약을 통한 식민통치 하에서 약탈된 문화재 반환은 애당초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과거 피식민국들의 불만에 봉착한 유네스코는 과거 약탈 문화재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78년 정부 간 위원회를 설치하여 제국주의 및 식민통치 하에서 일어난 약탈 문화재 처리를 법적인 차원이 아닌 정치,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시도해왔다. 이 또한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 하에서 일어난 약탈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선진국들의 반발에 부딪쳐 실적이 극히 저조했지만 점차 국제적으로 약탈문화재 소장의 비윤리성이 널리 인식됨에 따라 최근에는 이 위원회의 중재에 의한 문화재 반환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약탈 문화재 반환의 정치적 필요성과 도덕적 당위성이 국제사회에서 점차 인식을 넓혀가면서 1970년 이후에 일어난 도난, 도굴 문화재만을 다루는 유네스코의 문화재 반환체제는 재고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 계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가시화 되었다. 1990년 초 공산권 붕괴와 1995년 제2차 대전 종전 50주년을 맞은 국제사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으로서 20세기에 일어나서 사라진 나치즘과 공산주의를 회고하면서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에 천착했다. 그 중의 하나가 반환되지 않고 선진국 유수 박물관에 버젓이 소장되어 있는 나치 약탈 문화재 문제의 처리였다. 처참한 과거역사의 최대 수혜자가 된 부자 박물관들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는 약탈문화재의 반환 문제를 과거 역사에 대한 정의실현의 차원으로 연계해 나갔다.

나치의 만행으로 희생된 생명을 되살릴 수는 없다 해도 약탈된 재산에 대한 환수라도 실현시키겠다는 미국정부의 의지 하에 나치약탈 문화재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과 정의의 문제였다. 1998년 12월 미국정부

의 주도하에 44개국이 참가한 나치 약탈재산 반환을 위한 워싱턴 회의에서는 우선적으로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함께 나치 약탈 문화재의 환수가 최우선순위로 논의되었다.

Michael J. Bazyler, <<Holocaust Justice : The Battle for Restitution in America's Courts>>, 2003, NY University, xvii

워싱턴 원칙 - 문화재 소장자의 소장품 내력(provenance) 공개의무

약탈 문화재 반환의 최대 장애는 피해자(청구자)가 감당해야 하는 입증책임이었다. 피해자에게 가해진 입증책임은 비윤리적이며, 무엇보다도 전란을 당한 피해자가 약탈을 증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책임이다. 피해자에 의한 입증책임이라는 장애를 뛰어넘기 위해 회의를 몇 달 앞둔 1998.6월 미국정부는 미국 박물관 관장협회(AAMD, Association of American Museum Directors)에 의뢰하여 나치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 기준은 한 마디로, 약탈문화재 반환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박물관, 화랑, 경매회사는 자신들이 취득한 소장품 중 혐의 있는 모든 물품의 과거 내력(provenance)을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장품의 “과거 내력(provenance)의 공개”라는 미국 측의 기준에 대해 처음, 영, 불, 독, 화란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정한 원칙을 유럽 문화계에 강요하는데 대해 반발했다. 그러나 반발의 진짜 이유는 그러한 기준이 실현될 경우, 그것은 나치약탈 문화재의 반환을 촉발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일반 문화재 반환 움직임으로 확장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서구 문명의 초석을 이루는 박물관들은 공동화 되어 서구 문명의 기반이 뒤흔들릴 것이라고 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 미국은 “각 국가는 자신의 법체계 내에서 적절히 처리한다.”라는 타협안을 제시한 끝에 상기 원칙은 유럽 국가들에 의해 결국 수용되었다.

소장품의 과거 내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워싱턴 회의원칙은 1999년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와 세계박물관 협회(ICOM)에서 추인을 받고 명실상부하게 나치약탈 예술품 반환의 세계적 기준이 되었다. 물론 워싱턴 회의원칙은 나치약탈 유대인 예술품에 한정된 것이며 법적인 강제조치가 없는 도덕적 선언에 불과하며 각국 정부와 박물관, 미술관들이 알아서 국내적으로 적용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세계 문화재 시장의 핵심

주역인 미, 영, 불, 독, 스위스, 화란과 러시아, 중남미 등 세계 44개국이 정의와 도덕의 차원에서 공인한 워싱턴 회의원칙은 유럽 국가들이 우려한대로 나치 약탈문화재 반환의 경우 뿐 아니라 차후 모든 문화재 반환의 준거가 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워싱턴 원칙을 주도했던 미국 박물관장 협회(AAMD) 회장이며 당시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장이었던 몬테벨로(Philippe de Montebello)는 이 워싱턴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판도라 상자는 열렸다. 나치약탈 문화재 반환문제에 대한 반발이나 냉담, 침묵은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이것은 전체 문화재 소장자들의 심리상태를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이제 박물관, 화랑, 딜러들은 자기 소장품의 과거내력을 엄중하게 심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화재의 내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워싱턴 회의 원칙은 문화재 반환문제에서 획기적인 발상으로서 혁명적 변화를 몰고 왔다. 이 원칙으로 인해 문화재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거증책임은 문화재 내력을 공개해야 하는 박물관 등 문화재 소장자에게 넘어왔다. 이제 박물관들이 과거에 누려왔던 “무죄추정의 원칙”, 즉, 불법 문화재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되었음은 이후 일련의 문화재 반환사례에서 입증되었다.

Michael J. Bazyler, <Holocaust Justice: The Battle for Restitution in America's Courts>> 237쪽

1950-60년대 한일 문화재 반환협상에 대한 회고

문화재 반환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기류 속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재 반환은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가? 우선 1950-60년대 대일 청구권 협상에서 우리 문화재의 약탈과 반출 장본인인 일본을 상대로 벌린 대대적인 문화재 협상을 검토해 보자. 종전 후 연합국(참전국)의 일원으로 인정 되지 못한 한국은 교전국의 지위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로 배상이 아닌 청구권 회담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일련의 한일 청구권 회담에서 한국정부는 시종 약탈재산의 반환이라는 배상의 개념에서 대일 문화재 협상에 임했다. 한국정부는 1945. 9월 도쿄의 GHQ에서 발표한, “약탈재산은 약탈품으로 판명되는 한 일체 완전히, 즉시 반환해야 한다.” 는 GHQ의 초기 대일방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1952년 제2차 청구권 위원회에서 한국은 1949년 이승만 정부의 대일배상 청구위원회

에서 작성한 <대일배상요구조서>(문화재 부분)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총독부, 총독과 통감 반출 문화재 및 불법수집 혐의가 짙은 오구라 컬렉션 등 중요 사유문화재도 포함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임진왜란 시 약탈된 것으로 추정되는 <몽유도원도> 서화와 고려 말 왜구의 약탈을 상기시키는 일본 각지 소재 한국종(鐘)의 목록도 포함되었다. *한국외교문서 87. <제1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173쪽*

이러한 한국 측 입장에 대해 일본은 1953년 제3차 회의 이래 다음과 같은 입장으로 일관했다.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취한 문화재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며, 식민지 약탈 문화재 반환이라든가 문화재의 원산지로 문화재를 반환해야 한다는 국제법이 없으므로 한국의 문화재를 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문화협력의 차원에서 약간의 문화재를 기증할 의사는 있다. 구체적으로는 1910년-45년까지의 문화재 중에서 일본의 국유문화재를 대상으로, 사유재산과 북한출토품은 제외한다는 입장이었다.

1962년 제6차 회담에서 입장을 정리한 한국 측은 <반환청구 한국 문화재목록>을 제시하고 조선총독부에 의해 반출된 것, 통감 및 총독에 의해 반출된 것, 발굴 후 대부분 불법 반출된 경상남북도 소재 분묘 및 고려시대 분묘의 출토품 중 일본 국유재산, 불법 취득 혐의가 농후한 오구라 소장품, 기타 중요 사유문화재를 제시했다. 1958년 제4차 회의부터 회담에 참가한 한국의 전문가들은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의 불법 반출 근거를 적극 제시하며 총 5,617점의 반환 문화재 목록을 제출했다. 일본은 시종일관 처음 천명한 원칙을 고수하여, 사유문화재는 반환목록에서 전부 제외했다. 최종적으로 양국은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한일 협정>의 체결과 함께 총 1,432점의 반환으로 타결을 보았다.

회담 당시 냉전이 시작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국제사회 조기 복귀를 원하는 미국은 일본의 대외협상에서 가급적 최대한 일본의 입장을 비호하는 상황이었다. 승전국의 자격을 갖지 못한 한국은 독자적으로 일제 통치의 불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서 회담 내내 한국 침탈에 대한 반성을 표하기는커녕 기만과 무성의로 일관하며 구보타 망언에서 보듯이 한국을 우롱하는 일본을 상대하여 고군분투했다. 더구나 해방 후의 혼란과 한국 동란, 4.19, 5.16 등 국내외적 격변에 휩싸인 한국은 국제법이나 문화재 관련 지식과 정보의 부족, 회담에 대한 노하우 등 준비부족으로 고전했지만 오로지 약탈 문화재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그만한 결과를 끌어냈음은 오늘의 시점에서 마땅히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한일 문화재 회담의 평가, 교훈, 후속조치의 필요성

2015년, 50주년을 맞은 한일회담은 이제 역사의 한 장면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이때 개최된 한일 문화재회담은 그 규모와 역사성, 성과로 볼 때 국제사회에서 특기할만한 문화재 회담이었으며, 가히 세기의 문화재 회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늦게나마 이 역사적 회담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교훈을 성찰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일본 측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조선에서 취한 문화재는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했다.

당시 이토 소유의 청자가 그 구입의 불법성 때문에 90점이 반환되었음에도 일본이 회담에서 시종일관 정당한 취득이었다는 후안무취의 주장을 거리낌 없이 밀고나간 배경에는 거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한 무사할 것이라는 당시의 관행에 편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재 소장자에게 내력이 미심쩍은 소장품의 내력 공개를 의무화 하는 오늘날의 국제사회 원칙에 따라 우리는 일본에 소장된 수상한 한국문화재의 내력을 공개하라고 철저히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 식민지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이 없으므로 법률상 반환의무는 없다.

당시 이 분야의 성문법은 없었지만, 당시는 전시 문화재 보호 헤이그 협약(1954)과 전시 약탈문화재 반환을 명문화 한 헤이그 협약 의정서(1954)가 체결되어 국제적으로 약탈 문화재 반환의식이 고조되던 때였다. 또한 제2차 대전 후 인도네시아-화란 문화협정(1950)으로 식민통치 하에서 취득한 문화재가 반환되었고, 이태리 평화조약(1947)에서 문화재 반환의무가 부과되어 식민통치 결과 유실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이 주시되던 때였다. 특히 도쿄의 GHQ에서는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의 처리를 두고 다수의 정책이 입안되던 시기였던 만큼, “국제법상 반환 의무가 없다.”라는 일본의 이 같이 대담한 태도는 전후 극동에서 일본 약탈 문화재 처리를 둘러싼 미국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종전 후 서구에서 자행된 독일의 문화재 약탈범죄는 철저히 응징되었지만, 극동에서 일본의 문화재 약탈범죄는 유아무야 넘어갔던 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당시 미국이 입안했던 대일 문화재 정책을 조사하여 미완으로 끝난 일본의 문화재 약탈범죄 처리과정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과거 역사청산의 일환이자 향후 동종범죄

의 재발방지를 위한 길이다.

오늘날 여전히 과거 제국주의 시대 약탈된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은 없다. 그러나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는 법적인 차원이 아닌 정치, 윤리적인 차원으로 승화되어가는 추세에 비추어 우리로서는 일본정부의 윤리적 입장을 추급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일본은 약탈 혐의가 짙은 한국 문화재를 “내일 경위 불명” 이라고 설명하며 국가 지정 문화재로 등록해 놓고 있는데, 일본은 이들 문화재의 입수 경위를 실제로 조사해 보고 “불명” 이라고 판정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명” 이라는 설명은 경위를 밝히기 곤란한, 즉 불법으로 건너온 한국계 문화재를 일컫는 일본의 편의적인 관행이라고 보아야 한다면, 정부는 현재 일본의 국유문화재로 지정된 **경위불명의 한국 문화재의 내력을 공개하도록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3. 2012년 10월 도쿄 지방법원은 “한일회담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이라는 일본 시민단체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편에서 관련 문서를 공개토록 판결을 내렸지만, 2014. 도쿄 고등법원은 “문서를 공개할 경우 국익의 손상이 예상된다.” 라는 정부 측 입장을 받아들여 비공개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일본 외무성은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문서에는 그 동안 한국정부에 제시하지 않았던 문화재 목록과 한국이 납득하기 어려운 반출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한국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일제 강점기 한반도에서 반출한 문화재 목록과 이들의 유출경위, 취득가격 등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반환요구를 우려하여 이를 장기간 은닉해 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한일회담에서 신의성실의 중대한 위반이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정부는 문화재 관련 한일회담에 관한 전반적 검토나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늦게라도 일본정부에 대해 당시 은닉한 문화재 목록의 공개를 요구하고 그 중 중요한 문화재에 대한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4. 일본은 국유문화재가 아닌 사유 문화재는 돌려줄 수 없다하여, 데라우치 총독이 수집한 데라우치 문고를 제외시켰지만, 이 문고는 1996년 **기증형식**으로 경남대학교에 반환되었다. 더구나 한일 문화재 회담을 타결시킨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한일 협정>의 합의의사록에는 “일본국민이 소유하는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 측에 기증함은 한일 양국 간의 문화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일본정부는 이를 권장할 것” 이라는 합의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한일 문화재 협상은 미래 진행형이다. 한일 양국정부

는 문화협력 증진의 차원에서 계속하여 사유문화재의 반환을 권장,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유재산이라 하여 제외되었던 오구라 컬렉션은 1982년 도쿄 국립박물관에 기증되어 국유재산이 되었다. 이제 우리정부는 오구라 컬렉션에 대한 반환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5.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은 한일 양국이 1945년 이전에 발생한 양국 및 양국 민간의 모든 청구권 주장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문화재 반환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이 협약을 근거로 양국 간의 문화재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고 어떠한 문화재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스스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010년 일본정부는 한국 병탄 100주년을 기해 한국과 체결한 “한일 도서협정”에 의거하여 일제 강점기에 총독부가 반출하여 일본정부가 보관해온 도서 150종(1,205책)을 반환했다. 당시 마쓰모토 외상은 국회답변에서 도서의 반환은 “한일 청구권협정과는 관계없이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구축을 위한 일본정부의 자발적 조치”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일본정부는 “자발적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통감, 총독, 총독부 관리가 근거 없이 불법 반출해간 도서를 반환한 경우로서 일본이 불법으로 점유한 문화재를 반환한 것에 해당된다. 일본으로서도 불법문화재 문제는 청구권협정과는 관련이 없음을 인정한 것인데, 불법 문화재의 반환은 의무적 반환이며 자발적 조치가 아니다.

이에 앞서 한국 시민단체의 운동으로 2006.7. 도쿄대학이 소장한 조선왕조실록(중종, 성종실록 47책)이 기증형식으로 서울대에 반환되었다. 반환된 이 실록은 1913년 데라우치 총독에 의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오대산 사고본으로서 관동대지진 때 도쿄대 도서관에서 모두 불타고 남은 47책이다. 한국 시민단체가 재판을 준비 중인 가운데 도쿄대는 불법 반출 도서의 소장이 도쿄대의 평판에 미치는 악영향에 큰 부담을 느끼고 반환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만큼 오늘날 불법문화재 소장은 소장자에게 법적, 도덕적 문제를 초래한다. 우리는 일본 소재 한국 불법 문화재 보유 기관 및 개인을 설득하여 불법 문화재 소장의 문제점 내지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이들로부터 기증, 매각, 조용한 반환을 적극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6. 일본 약탈 우리 문화재 중 큰 부분이 고고학적 출토품이다. 이는 식민사관의 확

립에 광분한 총독부가 자행한 대규모 부실 발굴사업과 불법반출의 결과이며, 일확천금을 노린 일인들이 부추긴 도굴의 결과이다. 이같이 출토품의 막대한 불법적 성격을 감안하거나 고대 유물과 유적지의 파괴로 인한 우리 역사의 유실가능성을 우려할 때 고고학적 출토품의 회복은 다른 문화재의 회수에 비해 더욱 절실하다. 오늘날 문화재 분야에 신진 고고학자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음은 세계적 경향이다. 박물관 종사자들이 개개 문화재의 미적, 예술적 가치를 강조하는데 비해 이들 고고학자들은 문화재와 그것이 기원한 원장소와의 맥락의 관계에서 역사와 문명의 근원을 밝히는 지식으로서의 문화재 가치를 추구하며 문화재의 원장소 반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오늘날 장기화되는 중동지역의 전쟁 상황으로 고대 문명의 흔적이 파괴되는 우려가 큰 만큼, 중동사태에 대한 반성에서 국제사회는 문화재의 원장소 반환문제에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가고 있다. 문화재의 원장소 반환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한일 고고학자들과의 제휴 및 연대를 적극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1965년 일본 고고학계는 “일한 협약에 반대하고 과거의 일조관계를 반성하자”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 조직은 고고학의 윤리적 측면에 비추어 한국 문화재 반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日本考古學協會第七七回總會 研究發表要旨〉, 2011, 日本考古學協會*)

부석사 관음상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제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12년 10월 대마도 간논지에서 한국 절도단에 의해 반입되어 한국 검찰에 몰수된 된 부석사 관음상은 고려 말 서산 부석사에 침입한 왜구의 약탈물로 추정되는 만큼 이 불상을 일본에 반환하지 말라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수용되어 사건을 맡은 대전 지법 재판부는 간논지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소명할 때까지 돌려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7. 1.27. 대전 지법은 이 불상을 원소유자인 부석사에 인도하라는 판결과 함께 불상 인도 가집행 처분을 함께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이 난 당일 피고 측(법무부)은 곧바로 항소하고, 최종 판결이 나기 전 불상을 원고(서산 부석사) 측에 넘기지 말라고 강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대전 지법은 이를 신속히 수용했다. 같은 법원에서 상반되는 두 판결이 내려졌고 재판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재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왜구 약탈여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둘러싼 공방에서 비롯되었다. 왜구 약탈에 관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 한국 및 일본정부 측의 주장이다. 600여 년 전 일어난 무자비한 약탈사건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함을 고려할 때 약탈 증거에 매달리는 이 재판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미궁에 빠져있는 셈이

다. 이러한 미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피해자의 거증책임이 아니라 소장자가 정당한 취득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건 초기 법원의 가처분 판결의 논리였고, 오늘날 국제적 경향에도 부합하는 논리이다.

1990년대 초 위안부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부터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1993. 기시다 일본외상 일본 중의원 발언) 그러나 국민의 인권보호의 책무를 지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합의를 할 수 없으므로 청구권 협정은 위안부 인권문제와는 무관하다. 위안부 모집에 일제 관헌이나 군부의 관여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정부의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보상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여성인권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로서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인권의 문제라는 점에서 일본정부의 인정, 사죄, 보상만이 해결의 열쇠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실천하도록 일본정부에 압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전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방에서 벗어나 인권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이슈로 고양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재 반환문제에서도 피해국에 의한 약탈입증에서 벗어나 인류보편의 도덕 감정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프레임을 바꿔야 할 때이다.

문화재가 인류 문명의 물증이며, 이를 제작한 인간 집단의 역사적, 문화적 물증임을 후대에 알리는 문화재의 교육적, 공익적 성격이 강조되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문화재의 취급 및 소장기관에 보다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최근 국제적 경향은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를 문화재라는 물건의 환수가 아닌 약탈당한 역사의 회복이라는 윤리적, 도덕적 차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부석사 관음상 문제에서도 보다 고차원적이고 보편적인 이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부석사 불상이 왜구의 약탈물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이 불상은 서산 주민들의 역사적 문화적 증거라는 차원에서 서산 부석사에 반환해야 할 것이라는 도덕적 차원으로 프레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일 문화재 회담 및 한일 협정에서 그 반환 내용보다도 더욱 비판을 받은 것은 문화재의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표현이었다. 후안무척의 일본 측 말장난에 걸려든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팽배했다. 그러나 1950-60년 당시 연합국에서 제외되어 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었던 한국 측에게 “배상에 의한 반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고 애초 일

본 측이 제안한 “기증”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과 “기증” 사이에서 “인도”라는 용어로 실제적으로 반환을 달성한 한국 측의 전략은 크게 평가할 만하며, 이러한 발상은 오늘날 문화재 반환 해법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부석사 관음상을 반환하라는 근거로서 금과옥조로 매달리는 유네스코 문화재 반환협약의 반환조항 제7조를 면밀히 검토해보자.

제 7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a) 본 협약이 관계국가에서 발효된 이후에 그 국가 영역내의 박물관 및 그 유사 기관이 타 당사국으로부터 출처되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취득을 방지하도록 국내입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본 협약이 양 관계당사국에서 발효된 이후, 언제나 가능한 때에 출처 당사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이전된 문화재의 제공을 그 당사국에 통고한다.

(b) (i) 본 협약이 관계국가에서 발효된 이후 본 협약의 타 당사국의 박물관이나 종교적 또는 세속적 공공기념관 또는 유사기관에서 도난된 문화재가 그 기관의 물품목록에 소속됨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을 경우 그 반입을 금지한다. (밀줄은 필자)

(ii) 출처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약이 양 관계당사국에서 발효된 후 반입된 상기 문화재의 회수 및 반환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단, 요청국은 선의의 매수인이나 그 문화재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수 및 반환 요청은 외교관청을 통하여야 한다. 요청 당사국은 회수 및 반환청구를 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 및 기타 증거를 자국의 경비부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사국은 본 조에 의거하여 반환되는 문화재에 관세나 기타 부과금을 과하지 않아야 한다. 문화재의 반환 및 인도에 부수되는 모든 비용은 요청 당사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7조 (a)는 박물관 등 유사기에서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취득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 입법에 따라”라는 단서는 미국의 요청으로 특별히 삽입된 것인데 미국의 국회도서관, 국립문서국 등 국립기관을 상정한 것으로서 문화재 취득에서 법

를(예산)로 규제를 받는 국립 박물관 및 도서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사적 분야의 문화기관에 대한 협약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국이 특별히 제안했다 한다. 따라서 이 조항의 입법취지에 따른다면 소장품 취득에 관한 국내입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립박물관 및 소규모 문화기관 등은 이 협약상의 취득 금지 의무는 지지 않게 될 것이다.

(Kevin Jower,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gal Efforts to Protect Cultural Property: The 1970 UNESCO Conventio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8:145], 2003, p. 152 (footnote 65)

7조 (a) (i)은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도난 된 문화재의 취득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b) (ii)는 이러한 기관에서 반입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도난된 물품은 반입이 허용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 Jower, p. 153 (footnote 71))

무엇보다도 이 유네스코 협약의 해석에 있어 7조 (b) (ii)의 반환대상은 “정당한 소유권(valid title)을 가진 자” 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Gordon, J.B.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illicit movement of art. Harv. Int'l L.J.* 1971: 537. 1971) (Lyndel v. Prott, P.J. O' Keefe, <<Law and the Cultural Heritage vol.3>>, 1989 Butterworths, London and Edinburgh, p.750), 커몬 로 국가에서는 정당하게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한 한, 단순한 시간의 경과나 여러 소유자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난물은 영원히 도난물이며 누구도 도난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법원칙이다. 이러한 커먼 로 입장에서 미국은 유네스코 협약 비준 시, 단서에서 정당한 소유자에 대한 환수의 경우 보상의 지불(선의의 취득자 등에 대한)이 없음을 언급했다. (“미국은 체약국들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민법 또는 형법상 구제책에 편견 없이 도난 문화재의 정당한 소유자에 대한 환수는 보상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The United States understands that Article 7(b) is without prejudice to other remedies, civil or penal, available under the laws of the States parties for the recovery of stolen cultural property to the rightful owner without payment of compensation.) (*유네스코 홈 페이지,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

이를 정리하면, 대마도 간논지에서 불법 반출되어 한국에 반입된 부석사 관음상은 유네스코 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며, 정당한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한 간논지는 협약 상 반환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유산 회복을 위한 제안

“없고, 잊혀지고, 숨겨진 문화유산의 회복은 역사의 주인공을 찾는 일”



이상근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중앙신도회 사무총장
재단법인 불마다름은날 상임이사
조선왕실의궤환수위 집행위원장
서울시문화재찾가시민위원회 등 역임

(현)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현)명원문화재단 이사
(현)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뉴스 & 이슈 | 잃고, 잊혀지고, 숨겨진 조선 왕실의 이보와 어팩을 찾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 전시된 고종왕제 어보, 명성왕후 옥복, 1987...

2018-09-09 | **이상근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칼럼 | 불법무당반출 문화유산의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소네 통감이 부임한 이래 이국(조선)의 고서를 수집함에 열중했음은 일반 공지하는 ...”

2018-02-27 | **이상근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칼럼 | 국외에 반출된 문화재 현지 활용 주장하려면 소장기관 전수조사부

최근 국외반출 문화재의 귀환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월31일에는 조선왕실의 어책인 ‘호...’

2018-02-02 | **이상근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186년 동안 문화재 반환 운동 펼치는 그리스 정부



멜리나 메르쿠리: [그리스의 배우이자, 가수, 정치인, 사회운동가, 1981년~1989년, 1993~1994년 문화부 장관 재임](#)

대표적인 반출사례

- 고려 말: 왜구의 침구와 개성 흥천사 고려불화, 반자(쇠북), 부석사 관음상 외
- 임진왜란: 문화재약탈부대(보물/공예/도자기/서적) 진주 신라 연지사범종 외
- 구한말과 대한제국: '조선의 수집가와 소장품', 조선 통감부에 의한 약탈
-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골동품상, 총독부, 수집가, 무역자 등에 의한 반출
- 해방 후 미군정기: 핸더슨 컬렉션
- 한국전쟁시기: 조선왕실어보, 어책 외 / 미환수 국새 30과, 어보 45과, 어책 8책
- 도난과 불법 수집: 1980년대 이후 도난문화재 2017년 5월 기준 2만8260점 (문화재청)

문화유산회복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 하나 / 역사의 상처를 치유, 왜곡된 역사 인식 극복, 유산 속에 담긴 주체적, 창의적 역사관 확산
- 둘 / 남북공조와 민족 동질성 회복과 전파. <더 큰 KOREA> 형성
- 셋 / 지방분권시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 지역 대표 캐릭터 사업 지원과 부가산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 넷 / 전 세계 피탈국가와 연대, 협력을 통한 다자외교, 공공외교 확대
- 다섯 / 지속가능한 이야기 산업: '이야기의 자가 생산성'으로 인한 생성 발전 가능
(예: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할리우드 영화산업)

1. 청산되지 못한 한일 과거사, 대안 필요

- 우의 일본의 인식 - “야마구치의 사람들”
《우리나라[일본]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에서 유래하는 문화재는 모두가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입수되어 한국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한국 국민이 그 역사적 문화재에 대하여 갖는 깊은 관심 및 한국 동란에 의하여 그 문화재의 다수가 산실되어 버린 사정 등에 비추어 문화협력의 일환으로서 부속서에 기재된 우리나라 소유의 문화재를 한국에 기증하게 된 것이다.》
- 1965년 한일문화재반환 협정
- 2014년 한일협정문서공개 재판
- 대안 협정으로 <한일양해각서 체결> - 2014년 한미양해각서 참조
국회 중심의 논의 등 필요
- 유네스코 협약의 한계 극복
식민국가의 입장 반영한 국제협약 필요, 한국정부 주도

첨부: 65년 한일 협정당시 한국정부 반환요구 목록

구분	내용	당시 소장처
조선총독부에 의한 반출	경남 양산 부부총 출토품	도쿄국립박물관
	경주 노서리 215번지 고분 출토품	
	경주 황오리 제16호 고분출토품	
	평남 대동군 대동강면 정백리 127-227호분 출토품	
	평남 대동군 대동강면 석암리 201호분 출토품	
	평남 대동군 대동강면 남정리 116호분 출토품	
통감 및 총독에 의한 반출	평남 대동군 대동강면 왕우묘 출토품	도쿄 대학
	이토 히로부미 고려자기	도쿄국립박물관
	소네 아라스케 한국전적	공내정 서릉부
	테라우치 전적 서화발상	야마구치현립여자 단기대학
	통감부 장서	공내정 서릉부
	기와의 히로타미 장서 중 관부 기록	쿄토대학
일본 국유문화재 중 분묘 출토품	경상남북도 소재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매장품	도쿄국립박물관 기타 예술대학
	고려시대 분묘, 기타 유적 출토품	
	체신 관계 문화재	도쿄 체신박물관
일본 지정문화재 중 오구라 다케노스케 소장품	오구라 다케노스케 소장품	개인
개인 불법 수집품	야쓰이 세이이치 소장품	쿄토대학 등
	오구라 다케노스케 소장품	
	이치다 지로 소장품	
	석조 미술품(12점)	도쿄국립박물관 도쿄오쿠라집고관 도쿄네즈미술관 등

2. 남북공조와 <더 큰 KOREA> 형성

■ 사례

- 2005년 북관대첩비
- 2006년 조선왕조실록
- 2011년 조선왕실의궤 반환
- 남북공조 추진 현황 (북측 위임장)
- 미국 보스톤 미술관 소장 사리함
- 일본 평양율리사지 석탑

■ 주요의제

- ” 2018년, 고려개국1,100주년, 약탈된 고려유산회복 남북공조”
- ” 2019년 3.1절 100주년, 일제강점기 약탈문화재 반환 협력”

■ 방향

남북공조와 재외교민, 동포의 문화유산회복과 뿌리 공유하기



야스쿠니신사에 있을때 북관대첩비의 모습

3. 지방분권시대와 지역민의 반문화활동

- 조선총독부 등에 의한 징발
- 매장 출토물의 국가귀속 등
- 지역민의 요구 대표적 사례
 - 원주 지광국사탑, 김해 기마인물형토기, 서산 산수리미륵불, 김천 길항사석탑, 아산 충무공 장계별채, 서산 보원사철불
-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유물 지역이전
 - 진일보한 정책임에도 완전하지 않음
 - 국립박물관으로 임시이전

**‘원적지 중심으로 완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민의 유산’ 정착**

소속관	신수품*	본관품**	고적품***	합계
1 경주	225건 627점	264건 608점	1,247건 3,483점	1,736건 4,718점
2 광주	54건 74점	16건 70점	2,616건 12,868점	2,686건 13,013점
3 전주	47건 51점	91건 136점	130건 925점	268건 1,112점
4 부여	282건 354점	102건 221점	347건 932점	711건 1,507점
5 공주	443건 620점	78건 128점	287건 1,049점	808건 1,795점
6 진주	208건 607점	74건 258점	19건 50점	302건 915점
7 청주	118건 5,975점	31건 61점	81건 288점	230건 6,304점
8 대구	107건 130점	246건 657점	302건 1,258점	655건 2,045점
9 김해	968건 6,281점	215건 518점	988건 2,473점	2,172건 9,252점
10 제주	2건 17점	7건 14점	11건 16점	20건 47점
11 춘천	813건 1,050점	112건 238점	62건 150점	987건 1,438점
12 나주	60건 81점	12건 17점	56건 118점	128건 216점
13 익산	12건 28점	11건 27점	1건 1점	24건 56점
합계	3,321건 15,875점	1,259건 3,007점	6,147건 23,590점	10,727건 42,474점

*신수품: 해방 이후 입수 등록된 문화재

**본관품: 1915년~1945년까지 입수 등록된 문화재

***고적품: 일제강점기 미등록된 발굴품

활발해지는 지역 문화재 되찾기 운동

[도시의 품격 높이는 박물관 건립과 지역 문화유산 되찾기] ⑩ 안동·경주·상주 등
민관 협력해 문화재 되찾기 시민운동 전개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다

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문화재는 그 지역 주민들의 뿌리이자 자부심이다. 그리고 그 지역의 정신이며 정체성이다. 문화재는 각 지역이 발달과정에서 공유했던 시대정신과 그 뿌리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를 해석하면 각 지역이 오래전부터 증시해 오던 가치 등을 엿볼 수 있고 그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대중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

최근 국보 제121호 경북 안동 '하회탈·병산탈'이 53년 만에 귀환했고 청와대 경내에 있는 석물좌상을 원래 있던 경주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이슈화되면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택지개발과 돌산 조개더미(貝塚), 고인돌(支石冢) 발굴 등을 통해 여수 지역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 7000여점이 타 지역에 보관되고 있어 지역의 문화유산을 되찾아오기 위한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다.

◆과거 지역문화재 발굴되면 '국고'

이젠 문화재 자치 시대 <상>

오랜 기간 지역의 발굴 문화재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로 편입돼 왔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정부는 2000년대 중반까지 출토 문화재에 대한 지역의 귀속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과거 지자체의 문화재 소유권이 미약하던 시기에 문화재는 발굴과 동시에 국립·사립박물관, 대학 등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보관된 것이다. 이후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박물관으로 가던 지역 내 출토 유물을 지역 박물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더 과거로 간다면 위 사례들처럼 일제강점기에 위치를 옮긴 문화재들도 많다. 주로 일본인의 고의에 의해 옮겨지거나 그들을 추종하는 한국인에 의해 지역을 떠나게 된 경우다.

“지역 정체성과 직결”...지자체, 문화재 되찾기 중요성 인식 시급

기마인물형토기는 김해지역에서 출토된 가야의 대표 유물이지만 출토 당시 문화재를 보관·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국립경주박물관에 기증돼 현재까지 경주박물관에 보관·전시돼 있다.



4. 도난문화재 관리 실태와 개선 방안

- 현황(2017년 5월 기준) 2만8260점 / 주로 90년대이후 도난품
 - 도굴, 도난이 집중된 일제강점기와 70년대 이전 포함하면 급하급수 일 듯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수 조사의 필요성
- 최근 도난 문화재 반환 사례 증가하고 있어 더욱 대책 절실
 - 증가요인 / 개인 소장자의 세대교체로 소장품 '처분' 증가
- 정부 대책의 문제점: 도난문화재 중 인터폴에 등재 96점 불과
도난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 필요

조승래 의원 "도난문화재 2만 점 넘는데, 인터폴 등재는 96점 뿐"

문화재청 측은 "국보와 보물 등 중요문화재에 한해 인터폴 등재 요청을 했기 때문"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조 의원 측은 "문화재청이 인터폴에 등재된 도난문화재의 목록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만8260점의 도난 문화재가 있음에도 단 96건 만 인터폴에 등재된 것도 한심한 일인데, 이 96점마저 언제 어떻게 등재됐는지조차 모르는 곳이 문화재를 총괄하는 부처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며 "국제시장에서 도난문화재가 불법 거래되지 않도록 시급히 인터폴 등재 현황을 파악하고 다른 문화재들도 조속히 등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국감] 조승래 "문화재청, 도난문화재 관리 총체적 부실"

2017.10.16 아시아경제 다음뉴스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문화재청의 도난문화재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 교육...

- ↳ 조승래, "문화재청, 도난문화재 관리 총체적 부실" 2017.10.16 충청뉴스
- ↳ [국감] 조승래 "문화재청, 도난문화재 관리 총체적 ... 2017.10.16 대전시티저널
- ↳ 조승래 의원 "문화재청, 도난문화재 관리 총체적 ... 2017.10.16 충남일보

관련뉴스 8건 전체보기 >

5. 민관협력의 실패와 정부기관의 문제점

- 정부 전담 기관: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2012년 국회법률 통과, 2013년 7월 설립
 - 설립 목적: '환수' 위해 정부지원의 한계 극복, 민간지원과 협력, 불법반출문화재 환수 등
 - 박근혜정부: 환수팀 폐지 / 조사환수실->조사연구실 직제개편
 - 환수실적: 2012~2017년 전체 276점, 국외재단 8점 (구입, 기증 방식)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설립 이전 문화재청 지원과 대동소이 (별점)
- 전도몽상(顛到夢想)하는 기관
 - 정부간 협상보다는 손쉬운 구입, 기증에 치중 (예, 65년 한일협정 미환수문화재 조사, 협상 상)
 - 환수보다는 현지활용론 주창, 그러나 국외 박물관 '한국관 전시실' 등 전수조차 못
 - 민간활동 지원 가이드북, 매뉴얼 등 부재 '혼란 부추겨'
- 문화재홍보대사론의 주장은 약탈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포로 보고 '홍보 대사하라'는 격

[국감초점][종합]교문위, 문화재 부실관리·환수 '도마'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2012년 7월에 설립된 재단이 환수한 문화재는 미국 허미티지 박물관에서 기증 형식으로 받은 '석가삼존도', 크리스티경매에서 매입한 '관문양행각도' 뿐이다. 조 의원은 재단의 환수팀을 없애 직제개편이 환수 실적 저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들어 재단 이사회에서 직제규정을 개정하며 '조사환수실'로 바꾸고 환수팀을 없애낸 것으로 드러났다"며 "환수팀이 많고 있던 국외소재 문화재환수, 경매모니터링 등의 업무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재단이 환수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도교박물관 소장 '대한제국 고종 투구, 갑옷, 의선관 등', 오쿠라호텔 소장 '이천오출석탑', 조구신사 소장 '연지사종' 등은 사실상 민간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문화재 환수 4년간 5건 불과" 2017.10.15 이데일리 다음뉴스

국민의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외소재문화재단의 국외반출문화재 환수 실적은 지난 4년 동안 총 5건(직접매입 1건, 타기관 예산으로 환수...

↳ [2017국감]국외반출문화재 환수 지난 4년간 5건 불과 2017.10.16 아시아경제 다음뉴스

↳ 국외반출문화재 16만 점 ... 최근 4년 환수실적은 5... 2017.10.15 굿모닝충청

↳ 국외반출문화재 16만점, 지난 4년간 환수실적 5건... 2017.10.15 베타뉴스

美 한인교포들, 워싱턴DC 옛 대한제국공사관 복원 성금 8만달러 모아 전달

이 성금은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워싱턴)가 2003년 대한제국공사관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펼친 '고민 1인 10달러 벽돌 1개 쌓기' 모금 운동의 결실이라고 재단은 설명했다. 재단은 성금 기부자 명단을 건물 내에 기록물로 남겨 영구히 기념할 예정이다. 대한제국공사관은 올해 복원 및 활용을 위한 설계를 마치고 내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2015년 개관한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기증 말고는 환수책 없나"

"과하다. 해외문화재 실태조사와 보존 활용도 중요. 하지만, 재단의 설립목적은 문화재 환수에 있다."고 짚었다.

나. 2012년 이후 국외소재문화재 반환 실태

○ 현황 (유물의 기원내력, 취득 경위 및 취득방식, 소장 사유 등)

- 2012년 이후 환수된 문화재는 276점이며 세부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상국	연도	경위	문화재명	수량	보관처	비고
일본	2012	기증	이항가미요스강철 적석 배루 세트	1	국립고궁박물관	기증
일본	2012	기증	진해관 회화	1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일본	2012	구입	박지성화 동화제조 분병	1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일본	2012	구입	문종사기 사리병	1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일본	2013	구입	세기연신도	1	개인	구입
일본	2013	구입	분황사기인화문 '續寶' 용상	1	국립중앙박물관	고미유상 구입
일본	2013	구입	분황사기조화문분병	1	국립중앙박물관	고미유상 구입
일본	2013	구입	생원염반도	1	국립사	구입
일본	2014	기증	강진장악 파도모	62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일본	2014	기증	만약대 지회본	1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일본	2014	구입	수월관음도	1	이오세카시미술관	구입
일본	2014	구입	니진칠기 경합	1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일본	2014	기증	홍산대원고 글씨 연역(전)	1	국립중앙박물관	일본에서 구입 후, 기증
일본	2014	기증	법은록 향아리	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일본	2015	기증	손잡이잔	2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개인 수증 후, 우리문화재청기 관공복에 재기증
일본	2015	기증	긴옥 향아리	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개인 수증 후, 우리문화재청기 관공복에 재기증
일본	2015	기증	금다리 긴옥 향아리	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개인 수증 후, 우리문화재청기 관공복에 재기증
일본	2015	합상	익해왕주 유물 7점	7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 - 일본 문화재청 - 국립고궁박물관 기증 협의
일본	2015	구입	고리신종석함	1	화고지정서리	일본 소장자로부터 구입
일본	2016	기증	추사 김정희 서신 등	31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후, 민간(한국문화재단) 구입 후, 기증
미국	2012	구입	모자관도(8폭 병풍)	1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미국	2013	구입	이타카관도	1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미국	2013	구입	필어제도(디오라미)	1	국립중앙박물관	개미구입
미국	2013	구입	백자관도(화문도)	1	국립중앙박물관	개미구입
미국	2013	기증	순국 고립종 유적 등	90	국립중앙박물관	고립종기증



대상국	연도	경위	문화재명	수량	보관처	비고
미국	2013	수사 공조	호조대환권 현판	1	국립고궁박물관	한미수사공조
미국	2014	기증	조선황화(석가탑본도)	1	국립중앙박물관	국외재단추진/기증(미국학사대학)
미국	2014	구입	관음상(팔도)	1	국립고궁박물관	국외재단추진/국립고궁박물관
미국	2014	수사 공조	황제지보(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	국립고궁박물관	한미수사공조
미국	2014	구입	금동여의상	1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미국	2015	합상	익종아보	1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미국소장자
미국	2015	합상	신왕사 불화	1	조계종단	문화재청환수후,조계종에서인계
미국	2015	구입	불금관도	1	척지사	국외재단-척지사합의(경매구입)
미국	2016	기증	태극기	1	한남시립	A.W.Budbea 기증
미국	2016	소송	장영실부조	1	국립고궁박물관	개미구입후,소송
미국	2016	기증	영조장대	2	한남시립	A.W.Budbea 기증
미국	2016	기증	정선구	1	한남시립	A.W.Budbea 기증
미국	2016	합상	수인박서 인화	1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 - 미국 소장자 합상
미국	2016	합상	송강사 오봉도	1	송강사	문화재청 - 미국 소장자 합상
미국	2017	수사 공조	문정왕후아보	1	국립고궁박물관	한미수사공조
미국	2017	수사 공조	현종아보	1	국립고궁박물관	한미수사공조
미국	2017	합상	영봉상 불화	1	조계종단	LA카운티박물관합상
미국	2017	기증	문종도, 표기 등	5	국립고궁박물관	미국 개인
독일	2013	구입	폐사군신도	1	민간	국외재단-독일인 합
독일	2016	구입	석전왕 지장사왕도	1	석전왕	국외재단-독일인 합 (경매 구입)
독일	2016	합상	관어천도 불상 복합지 등	16	국립고궁박물관	성오탈리연수도원기증
프랑스	2013	구입	김치인 초상	1	국립중앙박물관	개인 구입
프랑스	2016	구입	육전사 사형도	1	국립사	국립(문화재청 합조)
스웨덴	2015	구입	별아사 불상도	3	별아사	국외재단-별아사 합
영국	2017	구입	김종 등 9점	9	개인	(경매 구입)
계				276		구입

국외재단 조사 현황(2017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국회고문위) (보고서 86P-92P)

- 실태조사(국립문화재연구소 1991~2016)/국외재단(2013~)
 - 총 167,968점 중 59,780점(35.6%)
 - 국외재단 한정 7개국, 26개기관, 19,484점 불과
- 출처조사 : 불법 부당반출이 의심되는 문화재 조사
 - 1건의 자체조사
 - 6건의 연구용역
 - 전담인원 비정규직 1명

국 가 별	일 본	미 국	독 일	중 국	러 시 아	영 국	프랑스	기타	계
국외문화재 현황	71,422	46,641	10,940	9,825	5,633	7,955	3,319	1,024	167,968
실태조사 완료 (조사율)	27,894 (39.0%)	11,880 (25.4%)	6,905 (63.1%)	2,448 (24.9%)	2,908 (51.8%)	2,489 (31.4%)	1,503 (45.2%)	1,024 (100%)	59,780 (35.6%)
								2,719 (24.2%)	11,209 (35.6%)

<2017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운영 지원 예산안 중 주요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2016년 예산(A)	2017년 예산안 (B)	증감(B-A)
실태 및 출처조사	600	600	-
환수	474	474	-
활용	394	583	189
홍보 및 DB구축 등	196	196	-
계	1,664	1,853	189

- 경매소 등 모니터링 : 약 3천개소 / 전담인력 전무
- 분야별 소요예산 현황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

단체명	지원금액					(단위: 원)	주요 사업내용
	2013 집행액	2014 집행액	2015 집행액	2016 집행액	2017 지원액		
문화재제자리찾기	44,343,808	37,439,501	32,170,000	-	-	-	국외문화재활수 운동 청소년아카데미 개최 문화재활수 관련 강연 등
(사)경남국외문화재보존연구회 舊(사)연지사총환수위원회	20,200,000	27,531,518	21,720,961	22,918,144	28,000,000	-	현소장처 방문협상(일본) 연지사총환수세미나개최 종모형제작보급등홍보등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舊(사)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9,740,000	23,399,880	35,738,700	35,919,650	40,000,000	-	우리문화재활수UCC공모전 역사문화퀴즈놀이 불국사들사자 찾기 캠페인 아스카엔 소장사진전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	26,755,653	20,878,165	23,028,787	28,468,143	27,000,000	-	현소장처 방문협상(일본) 백일장및 사생대회개최등
대한연합회	-	-	12,556,982	13,216,074	-	-	국외한국문화재실태조사등
문화재찾기한민족네트워크	-	-	26,635,710	19,044,279	30,000,000	-	독일및중국소재문화재 조사및교섭 중국및일본교포대상교육
대한활실문화원	3,923,980	-	-	-	-	-	도교국립박물관 소장 조선왕실유물 현지조사 등
양산유물환수운동추진위원회	6,987,400	-	-	-	-	-	양산부부종 유물관련 학술대회 개최 등
사랑의종신기부운동본부	-	-	-	15,999,500	-	-	'디지털 귀향' 전시및 공연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	-	35,000,000	-	-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발간
한국문화인보존연구원	-	-	-	4,811,340	-	-	학술세미나 개최
고산문화재단	-	-	-	-	15,000,000	-	일본소재 문화재 반출경위 기초조사
고양문화원	-	-	-	-	10,000,000	-	현지네트워킹 구축
(사)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	-	-	-	-	30,000,000	-	강원도문화재관련자료수집 강원도문화재 반출 관련학술용역
	111,950,841	109,249,064	151,851,140	175,377,130	180,000,000	-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무조건 환수보다 현지 활용"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무조건 환수보다 현지 활용"



2016.10.04 조선일보 다음뉴스

제2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조사·연구, 환수 활용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이다. 임기...

해외 반출 문화재 실태 파악부터... 그리고 환수 나서야



2016.10.21 세계일보 다음뉴스

잇달장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출된 것들", 통제는 "외교 통상 선물 구입 등... 것들은 '현지의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는..."

해외 불교문화재 환수에 대한 고언 2016.10.06 불교저널

놓았는데 무조건 환수보다는 현지 활용에 초점을 두고 싶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30일... 10,940점이고 이외에도 1,000점 이상 우리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

지건길 국외문화재재단 이사장... 무령왕릉 발굴 작업한 '고고학맨'



▲장관상 객원기자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현지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홍보할지 중점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지건길(73·사진)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제2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조사·연구, 환수 활용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이다. 임기는 2019년까지 3년. 지 이사장은 "그동안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구입이든 기증이든 무조건 돌려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는데 '무조건 환수'보다는 '현지 활용'에 초점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문화재 환수는 사자가 사냥하듯... 요란 떨면 소탐대실"

인취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문화재는 환수보다 활용이 더 중요해" 2013.11.25 머니투데이 다음뉴스

재단 인취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는 '고궁으로 돌아온... 얼마나 감시하게 여기며 자신들이 소장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활용하는지를...'

-환수와 활용의 비중은 어떤가. 바람직한 현지 활용은-

"환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현지 활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환수와 현지 활용은 똑같이 중요하다. 국외로 나가 있는 문화재 중 상당수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외국장각 도서관장 소장(死藏)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많은 문화재가 지하 수장고에서 통곡하고 있다. 이들이 전시돼, 그곳 국민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이들 문화재를 소장, 관리하는 곳은 다른 나라, 다른 기관들로,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 박물관 큐레이터를 초청해, 혹시 우리 문화재가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만약 있다면 활용해달라고 요청하고, 그중에서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우리 예산, 우리 인력으로 온전하게 복원해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교류가 빈번해지면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환수 이상으로 현지 활용이 중요하다."



미주 한인동포 대한제국공사관 건물복원 성공전담식 2013.07.18 헤럴드경제 다음뉴스

이사장 인취준)은 지난 17일 오후 6시(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대한제국공사관 건물(로건서를 소재)에서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 등 교민사회 각계 대표들을...

- 1. 美 한인동포들 대한제국공사관 복원에 성금 2013.07.19 문화일보 다음뉴스
- 2. 재미동포, 옛 대한제국 공사관 복원 성금 전달 2013.07.18 한겨레 다음뉴스
- 3. 미주 한인동포, 대한제국공사관 건물 복원 성공전담 2013.07.18 연합뉴스 다음뉴스

관련뉴스 8건 전체보기 >

6.가치 : 계승.활용.창달=문화유산을 통한 창의적 역사의식 확산

- 문화재 정책은 수집 보관 중심 “유산을 과거에만 머물게 함”
점(點)에서 면(面) 나아가 시공(時空)을 포함한 입체(立體)적 관점에서 정책 수립 필요
- 불법무당반출문화유산의 회복 과정을 통해 역사적 정체성, 민족적 동질성 확장에 기여
- 미래세대에게 ‘창의성 함양’ 과 도전의식 고취
- “박물관이 살아있다.” 프로젝트 필요
 - 사립박물관 342곳, 관람객 현황 등 편차 극심 (예 종교박물관 50여곳, 10만명이상 관람객 4곳)
 - 운영개선 위해 지원 협력 개발 “플랫폼” 구축 필요 : 스토리텔링, 캐릭터 발굴, 탐방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웹기반구축
 - 기획전시 개발, 학술연구 지원 등 서비스 기반 마련
 - 지역민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지역축제와 연계한 캐릭터 상품 개발, 스토리 발굴 대회 등

“문화재는 현존 하는 그 어떠한 물질보다 높은 평가를 받으며 자체의 가격측면과 함께 관광산업, 브랜드, 이미지, 저작권 등 문화콘텐츠 창출, 박물관 진흥과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 무궁무진한 산업의 보고(寶庫)이고 국부(國富)의 원천이다.”

7. 정부의 과제와 제안

- 국외소재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
 - 민관협력모델 창출 (국외소재 문화재 조사, 교민, 유학생 참여유도)
- 65년 반환협정 문제해결 위한 "한일문화재반환양해각서 체결"
- 남북협력과 공조 과제
- 국제사회 이젠다 주도 : 식민지배 독립국의 입장을 반영한 '국제협약' 필요
- 문화재보호법, 관련법 전부 개정 필요
 - 주요 이력
 - 1948년 : 일제 강점기 때의 법령인「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 제헌 헌법 제100조 규정에 의해 그 효력을 지속
 - 1950년 「궁궐궁재산처분법(舊王宮財産處分法)」 「궁궐실재산법(舊皇室財産法)」(1954) 제정
 -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시간에 쫓겨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모태로 제정
 - 총 48차례의 개정, 6개의 관련 법령, 9개의 대통령령 체계로 법 체계상의 통일성 유지 필요
 -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의 확장과 국제사회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지방분권요구 증폭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법률 필요
- 압류면제법 반대 : 불법문화재 세탁 가능성 농후, 주요 피탈국은 법 제정 안함 :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제정
- 문화재청 예산 정부예산 대비 1% 확보 절실

한국과 일본: 문화재보호법 비교

〈한국〉 본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이 법률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또한 그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세계문화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재의 정의

〈한국〉 본 법에서 문화재라 함은 다음에 계기(掲記)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이하 "유형문화재"라 한다)
2.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재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
3. 패총, 고분, 성지, 궁지, 묘지, 유물 포함층 기타 사적지와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큰 것(이하 "기념물"이라 한다)
4.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器具), 가옥 기타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推移)를 이해하는데 불가결한 것(이하 "민속자료"라 한다)

〈일본〉 이 법률에서 「문화재」라 함은 다음에 계기(掲記)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조물,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 전적, 고문서 기타의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 및 고고자료(이하 「유형문화재」라 한다).
2. 연극, 음악,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
3.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 및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기타의 물건으로서 우리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이하 「민속자료」라 한다)
4. 패총, 고분, 도성적(都城跡), 성적(城跡), 구택(舊宅) 기타의 유적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 역사상 또는 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 정원, 교량, 협곡, 해변(海岸), 산악, 기타의 명승지로서 우리나라에 있어 예술상 또는 관상(觀賞)상 가치가 높은 것 그리고 동물(생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 지질광물(특이한 자연의 현상이 생겨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이하 「기념물」이라 한다).

문화재 관련법 현황(2017년 기준)

1. 법령

- 문화재보호법(1962년 제정)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2004년 제정)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2006년 제정)
- 문화재보호기금법(2009년 제정)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0년 제정)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0년 제정)

2. 대통령령

-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 문화재위원회 규정
-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 재정지출규모 대비 문화재청 지출규모 추이>^v

(단위 : 억원)

연도별	정부재정지출규모 (A)	문화재청지출규모 (B)	비율(B/A)
2003	1,556,659	3,383	0.22
2004	1,969,410	3,500	0.18
2005	2,095,980	3,415	0.16
2006	2,347,066	3,695	0.16
2007	2,337,186	3,989	0.17
2008	2,571,657	4,278	0.17
2009	3,017,526	4,925	0.16
2010	2,928,159	5,212	0.18
2011	3,090,567	5,228	0.16
2012	3,254,076	5,577	0.17
2013	3,425,060	6,148	0.18
2014	3,558,051	6,199	0.17
2015	3,754,000	6,887	0.18
2016	3,864,000	7,311	0.19
2017	4,005,000	7,891	0.20
2018	4,290,000	7,746	0.18

2018년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홈페이지 발췌)

지·정·토·론·문

1.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2. **김동영**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장
3. **주 경** 불교사회연구소장
 - － 부석사 금동관음상 환수과정과 정부 대응의 문제점
4. **김영관** (사)대한황실문화원 문화재환수위 연구위원
 - － 구황실재산법 개정의 타당성

문화재 환수 현황과 과제 토론회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1.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관련 개요

- ‘불법반출 문화재 반환 문제’는 문화재가 제작된 원소유국을 떠나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타 국가의 공공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게 된 문화재에 대하여 원소유국이 반환을 주장하는 문제임
-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관련 협약이 제정되어 왔으나 구속력이 없는 국제법의 한계에 직면해 왔음
 - 1970년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나 1970년 이후 거래된 문화재에만 적용되고 있음
- 문화재 환수는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에 의존하기보다는 해당 국가 정부 간 협상, 기증 혹은 구입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음

2. 정부, 국회 및 민간 차원의 노력

1) 외교부, 문화재청 등 정부 차원의 성과 및 한계

- 2011년 4월 8일 외교부는 해외 유출 우리 문화재의 환수·활용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범정부적 활동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1차 해외문화재협의회” 개최된 바 있음
 - 동 협의회에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유관기관 국(과)장급 인사 참석
 - ※ 동 협의체는 2011년 12월 2차 회의, 2012년 6월 3차 회의, 2012년 12월 4차, 2013년 6월 5차 회의, 2013년 12월 6차 회의, 2014년 6월 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소집됨
 - 동 협의회를 통해 협의회의 향후 운영 방향과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방안 논의

- 참석 기관들은 해외문화재 환수·활용 활동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국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제기하는 한편, 정부기관의 참석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 또한, 2011년 4-5월 중 문화재청 내 신설될 해외문화재환수 전담조직인 “국외문화재환수팀” 과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체계적인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정책을 시행해 나가기로 함
- 한편, 정부와 민간 간 쌍방협력(two-track)을 통한 다각적인 전략 시행을 위해 문화재청 내 “국외문화재환수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함

※ 2012년 7월 ‘국외소재문화재재단(overseaschf.or.kr)’ 설립

- 2012년 10월 16~17일 외교부는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2012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 개최됨

- 동 회의는 문화재 환수 분야 국내외 석학과 유네스코, NGO 대표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문화재 환수 활동 사례와 전략을 논의하고, 문화재 환수 관련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함

- 2012년 6월 13일 한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 양국이 문화재의 국경 간 불법 수입, 수출 및 이동 방지에 협력하고 양국이 당사자인 국제 조약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에 동의함

- 2012년 6월 22일 제18차 ‘문화재반환촉진정부간위원회(ICPRCP)’에서 한국의 이근관 서울대 법대 교수가 2년 임기의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됨

※ 동 위원회는 총 2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아태그룹(6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몽골, 스리랑카(이상 2013~2017년 임기), 일본,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2011~2015년 임기)이 포함

- ICPRCP는 불법적으로 이전된 문화재의 기원국으로의 반환을 위한 논의 및 협상틀을 제공하기 위해 1978년 제20차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에 의해 창설됨

- ICPRCP는 문화재 반환을 위한 양자협상 촉진 및 다자협력 증진, 관련 연구 장려,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 2013년 11월 14일 제3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이 ICPRCP의 위원국으로 연속 선출됨(임기: 2013~2017)

- 2014년 7월 한국 문화재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부 간에 「문화재 보호, 회수 및 원상회복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

- 미국 내 개인 소유자들로부터 환수된 어보 두 점의 한국 조기 반환 합의

- 2016년 10월 17일~19일 ‘제6차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 경상북도 경주시 개최

- 동 회의는 문화재 피탈국의 전문가, 시민사회 등 민간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재 도난과 불법 반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정보 공유와 국

제협력을 통해 환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동 회의는 2011년부터 한국, 중국, 터키, 그리스 등이 참여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음

※ 역대회의 개최지: 제1차 회의(2011)/제2차 회의(2012) 서울, 제3차 회의(2013) 그리스 올림피아, 제4차 회의(2014) 중국 둔황, 제5차 회의(2015) 터키 네브세히르

□ 2018년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 2017년 성과: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국제협력 확대

- 수사공조, 협상 강화 등을 통해 19건 50점 환수('13 ~ '17)

◦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14), 문정왕후어보·현종어보('17) 등

- 국외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로 문화재 환수기반 마련

◦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영문판 제작 및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등에 배포('17.8월)

- 개선과제

- 국제법적 강제성 미비, 문화재 소장국 협상기피로 환수 실효성 확보 한계

◦ 대마도 도난 불상 문제로 일본 내 한국문화재 조사 및 반환거부 분위기 확산

- 개선방향: 국외문화재의 효율적 환수 기반 강화

- 실태·유통조사 지속 추진으로 활용·환수 기반 마련

◦ 유럽·일본 주요 소장기관 실태조사(7억원/프랑스 기메박물관 등)

◦ 경매 모니터링 강화 및 오프라인 유통시장 조사 확대

※ 외국 경매소 (2017년 현재, 20개국 300개소) → 고미술상, 개인 등 포함('19년까지 400개소로 증가)

- 민간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강화

◦ 환수 민간단체 지원(2억원) 및 한일 민간교류 추진(1억/한·일 연구자포럼 등)

◦ 국외 불교문화재 환수 협력(도난 불교문화재 수사 확대 등)

◦ 「불법거래방지협약 부속위원회」 부의장국('17.5월 신규 선출) 및 「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 위원국('17.11월 연임) 활동 강화

2) 국회 차원

□ 문화재 관련 법률

- 「문화재보호법」(1962년 제정),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2004년 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2006년 제정), 「문화재보호기금법」(2009년 제정),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0년 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0년 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2011년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5년 제정) 등

- 20대 국회에서 ‘문화재’ 관련 법안은 총 47건 발의됨(2018.3 현재)
 - 그러나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법안은 찾아보기 어려움
- 2018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 하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일명 ‘압류면제법’) 개정이 추진된 바 있으나 발의를 포기한 사례가 있음
 - 개정안의 핵심은 한시적 압류면제 조항으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국내로 들여와 전시하는 동안 우리 정부가 압류나 몰수를 금지하고 외국 정부에 ‘안정적 반환’을 담보한다는 것임(예: 그랑스 국립도서관 보관 ‘직지심체요절’ 국내 전시)
 - 하지만 법안 준비 과정에서 반대 여론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주요 찬반여론은 다음과 같음
 - 찬성: 압류면제조항은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필수이며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져 우리만 압류면제법 제정을 미루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임(서봉근 서경대 교수)
 - 반대: 일각에서는 압류면제법이 유물의 불법 반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임. 특히 이러한 법안은 약탈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며 피탈국가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임

3. 대응전략 및 방향

- 첫째, 불법반출 문화재에 대한 반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환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적극적으로 해당문화재들의 불법 반출 경로를 확인해 우리가 반환을 요구할 근거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조사 방안의 수립이 요구됨
- 둘째,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부간 정책의 연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7차 회의로 중단된 ‘해외문화재협의회’ 재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동 협의회는 우리 문화재의 소재 파악, 관리, 활용에서부터 환수에 이르기까지 정부 유관부처 및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음
 - 한편, 외교부는 그간 해외 유출 우리 문화재의 소재 파악, 문화재 보유국과의 외교적 교섭 및 유네스코 등 관련 다자기구에서의 논의 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외교부 내 문화재 관련 업무는 외교부 제2차관 소속 공공문화외교국 산하 ‘유네스코과’에서 담당하나 문화재 환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보완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셋째, 국내 여론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함. 특히 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들의 지원 및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정부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한편 문화재 환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 여론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 전문가 및 비정부기구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문화재 환수 전문가, 시민사회 및 민간단체 또는 각 국가의 불법 반출 문화재 목록 업데이트에 협조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등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ICPRCP 등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넷째, 문화재 보유국과의 외교적 협상 및 유네스코 등 관련 다자기구에서의 논의 참여 등을 통해 문화재 환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한 문화재 환수 사례는 매우 적으며, 문화재 반환 논의 과정에서 상대국 비방 등으로 통해 국민 정서상의 인식 악화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큼
 - 따라서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문화재 환수 문제는 외교 문제이자 민간 교류 및 학술 교류 문제로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폭넓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음
 - 한편 한일 양자간, 한·중·일 3자간, 혹은 다자간 회의 등을 통해 동 사안을 지속적으로 의제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문화재 피탈국 정부 및 전문가, 시민사회 등 민간 활동가들과의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환수 할 수 있는 공동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다섯째, 문화재 긴급 매입을 위한 예산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 2017년 10월 현재, 국외소재문화재는 20개국 약 16만 8천여 점에 달하며, 노출되지 않은 개인 및 기관 소장품까지 합하면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가운데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해 2012년 7월 출범한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국외반출문화재 환수 실적이 2013~2017년 4년간 직접 매입 1건, 타기관 예산으로 환수협력 4건 등 총 5건에 그쳐 정부의 문화재 환수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됨
 - 이 문화재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가 한국전쟁 등 혼란기에 유출되어 불법반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없어 환수가 쉽지 않다는 견해가 있음. 따라서 국가간 협상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문가들의 국외 소장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발굴과 매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

- 그러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예산 가운데 문화재 긴급매입 비용의 부족(2018년 예산 12억2000만원 규모) 등으로 해외 경매에서 국보급 문화재를 발견해도 매입 시도 조차 할 수 없어 동 재단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음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현황과 과제 토론회

김동영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장

부석사금동관음상 환수 과정과 정부 대응의 문제점

주 경
불교사회연구소장



관음상의 내력

- 1330년, 혼란기의 고려, 서산 부석사에서 32인의 신앙결사체로 태어나다.
‘다른 불상과 달리, 민초들에 탄생·민초들의 염원’ **중생구제**, **“내세 평안”**, **“부석사에 길이 봉양”**
- 1350년~1400년대, 왜구 침구 530여회, 서산 지역 7회 이상 침구
- 1526년, 왜구 수장 ‘고노 관음사 창건’ **“본존불 관음상”** 봉안
- 1951년, 관음사 주지 안도 료순 **“복장물 발견, 부석사 조성 내력 등 밝혀져”**
- 1973년, 나가사키 현 지정 문화재 등록 **“소유자 관음사”**
- 1978년, <대마의 미술> 등에 대마도 소재 불상, 범종, 불구등 소개
“왜구에 의한 일방적 청구에 의한 유래” 기쿠다케 준이치 교수

부석사 봉안활동

- 1995년, 부석사 주지 도광 스님, 대마도 관음사 방문, 불상 실태 등 조사
- 2004년, 서산문화원장 등 관음사 방문, 환수방안 등 협의
- 2012년, 한국인 절도단 불상, 대장경 3점 절취 후 불상 국내반입
- 2013년, 대전법원 "관음사가 정당하게 취득하였다고 재판에서 확정하기 전에 한국정부는 일본에 돌려주지 말라" 판결
- 2017년, 대전법원 1심 재판부 "왜구에 의한 약탈과 부석사 소유 인정되는 부석사로 인도하라" "형이 확정되기전이라도 부석사에 가집행하라." 판결
- 한국정부, 항소 및 가집행 가처분 신청->가집행중지 및 항소심 계류 중

검찰의 항소이유와 문제점

- 불상의 진위(眞僞)는 결연문의 진정성에 있으니, 결연문의 진위를 확인해야한다.
⇒ 불상의 진위여부는 형사사건 재판당시, 일본정부 감정서 등으로 확정 형사사범 특수절도죄로 중형 선고 / 항소이유는 이중잣대
- 고려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성이 있는지 석명하라.
⇒ 지표조사, 상량문, 고지도, 조선 법령 등으로 입증 / 시간 끌기 항소
- 일본과의 외교관계 고려, 유네스코 협약 준수 해야
⇒ 문화재 등 과거사에 있어 일본의 입장과 태도에 더 큰 문제
대다수의 한반도 반출 문화재가 취득과정 소명없이 국보 등 지정 유네스코 협약은 시효한계, 권고조항 등의 제약으로 '약탈'에 한계

정부 대응의 문제점

- **원고 배제, 정보 독점:** 가처분 결정으로 2014년 검찰청 주관으로 <불상재감정조사> 등에 있어 원고측 입장 배제, 조사결과서 제공 지연 등
- **항소권 남발:** 1심 판결 직후 수시간만에 항소, 가집행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단 하루만이라도 부석사에 봉안하자는 지역민 염원 묵살', 이탈리아의 모나리자 사건과 대비
- **대일 관계 저하세:** 정당한 취득임을 밝히려는 법원의 판결에 일본정부로 부터, 관음사를 소유자로 지정한 사유, 취득경위에 대한 소명 등 요구 못하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등 '조속한 일본 반환 촉구' 등 본말전도 양상 지속

향후 과제

- **가치:** 고려후기 대표작, 민초들의 신앙결사체, 대마도 등 소재 불상 중 유일무이한 출생 신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등불
- **의미:** 유네스코 협약 시호 이후인 도난문화재와 시호 이전인 약탈문화재에 있어, '사법적 판단의 사례', 반환시점을 일제강점기 등에서 '고려시대'로 확장
- **정부조치:** 항소 취하 아니면 최소한 가집행정지 가처분 취하로 부석사로 봉안
- **부석사:** 사실 규명, 국제법과 일본 민법 등 재판부의 석명 요청에 최선을 다함으로 향후 왜구와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의한 약탈문화재 반환에 시금석

⇒ **찬반, 시비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환수운동의 미래를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응원**

구황실재산법 개정의 타당성

김영관 () 대한황실문화원 문화재환수위 연구위원

목 차

- A. 구황실재산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 B. 불법적으로 반출 편취 탈취 몰수된 구황실재산들 그리고 ‘구황실재산법’의 위헌성 여부
- C. 역사 바로 세우기와 일제식민잔재 청산의 완성으로서의 구황실재산 복원과정 참고자료

A. 구황실재산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구황실재산법은 대한제국 기에 황실관련 업무를 관장하던 궁내부의 위상과 권위를 격하하고 그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개편되어 설치된 이왕직청에 그 뿌리가 있다.

해방 후 1945년 11월 8일 미군정 훈령으로 구황실 재산 관련 업무를 관장하던 이왕직청이 구황실 사무청으로 개조되어 출범케 됐다. 일제강점기 말까지 이왕직청이 관장한 황실 재산 중 임야, 대지, 전답의 총면적은 약 1억5519만8532평에 달했다(Cf. 월간 ‘신동아’ 1968년 8월호 & 국회도서관, 『이왕가세습재산유서조』 [李王家世襲財産由緒調]).

이후 1948년 8월 16일 구황실 사무청이 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됐고,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주도하에 국회에서 구황실재산처리법이 제정되면서 대한제국 황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구황실 재산 전체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로 모두 불법적으로 탈취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승만이 황실의 재산을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정부의 소유로 탈취한 이유는 영친왕을 정치적인 라이벌로 여겨 황실의 ‘힘’을 빼버릴 목적으로 취한 여러 조치 중의 하나였음을 2006년 10월 24일 자 주간동아의 ‘땅 한 평 안 남기고 공중분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다.

1955년 6월 8일 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는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 개편되면서 그 사무국이 창덕궁 내에 설치됐는데, 1960년 6월 6일 새벽 사무총국 안에 화재가 발생해 청사(목조 2층 80평)와 중요 서류 집기 등이 모두 전소되어 아침 5시 10분경에 진화됐다.



<1960년 6월7일 구황실재산관리총국의 화재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

1960년 6월 7일 자 동아일보 ‘구황실재산관리총국을 전소...농후한 방화 혐의’ 제목 하의 기사에 의하면 △방화 △누전 △숯불의 세 각도에서 화재의 원인을 수사했던 경찰은 의도적인 방화에 무게를 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왕직청으로부터 구황실의 재산목록을 모두 이관 받아 보관하고 있던 곳이 방화혐의로 인한 화재로 당시 경찰이 추정한 이유는 총국 직원들이 정부의 감시를 피해 황실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여 상당 부분 처분한 사실이 발각되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한

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1960년 총국장으로 새로 임명된 오재경 대한여행사 이사장은 당시 문교부 국장이었던 이창석에게 황실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창석 국장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관련 서류가 부실해 면밀한 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간신히 재산목록을 만들어 정리에 착수하려는 순간 화재가 발생하여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목록도 모두 사라지고 만 것이었다. 이 국장은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구황실 사무처에 가보니, 신빙 서류가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속여서 해먹었는지 알 수 없어서 놀랐습니다. 그나마 조사를 해서 대강이나마 증거서류를 만들어놓으니까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으니, 그것은 분명히 방화였다고 생각합니다” (Cf. 김을한.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2010).

이렇게 이승만정부에 의해 몰수된 구황실재산은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안의 부패한 공무원들의 농간으로 불법적으로 민간에 매각되거나 매도되고 말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은 1961년 10월 2일 폐지되어 문화재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문화재 관리국에 흡수되고 말았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구황실재산법은 1962년 4월 10일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다.

구황실재산법

[시행 1962.4.10.] [법률 제1050호, 1962.4.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본법은 구황실재산을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과 별도로 구황실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유의 대상) ①구황실재산은 국유로 한다.

②전항에서 구황실재산이라 함은 구한국황실의 소유에 속하였던 재산으로서 구이왕직에서 관리하던 일체의 동산, 부동산 기타의 권리를 말한다.

③전항의 재산에는 그 재산에 따르는 의무를 포함한다.

제3조 (재산의 구분) ①구황실재산은 영구보존재산과 기타재산으로 구분한다.

②영구보존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각령으로 지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1961. 10. 17.>

1. 중요한 단, 묘, 사, 원, 전, 궁, 릉, 원, 묘와 이에 따르는 건조물과 그 부지
2. 중요한 미술품, 역사적 기념품 또는 문적
3.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4. 전각호에 유사한 재산으로서 영구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

③기타재산은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일체재산을 말한다.

④기타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갑종재산과 을종재산으로 구분한다. 갑종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 사무용, 사업용이나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을종재산이라 함은 갑종재산이외의 재산을 말한다. <신설 1961.10.17.>

제3조의2 (재산의 운용 및 처분 등 제한) ①영구보존재산과 기타 재산 중 갑종재산은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단, 갑종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기타 재산 중 을종재산은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단, 공공단체가 직접 공공용, 사무용, 사업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상으로 이를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와 전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1.10.17.]

제4조 (생계비의 지급등)

①구항족의 생계유지상 필요할 때에는 제3조의 기타재산의 율종재산 중에서 이를 구항족에게 양여하거나 또는 구항실재산특별회계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항족이라 함은 본법 시행당시 생존한 구항실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62.4.10.>

1. 악선제 윤씨(순종의 부인)
2. 삼축당 금씨(고종의 부인)
3. 광화당 리씨(고종의 부인)
4. 사동궁 금씨(리강의 부인)
5. 리은과 그 배우자
6. 리덕해(고종의 녀)

③구항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교육기관의 유지경영상 필요할 때에는 제3조의 기타재산의 율종재산 중에서 이를 그 교육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할 재산의 종류와 그 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⑤전4항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할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당해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한 후 각의의 의결을 거쳐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61.10.17.]

제5조 (영구보존재산관리청)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구보존재산의 관이사무는 문교부장관소속하의 문화재관리국이 관장한다.

[전문개정 1961.10.17.]

제6조 (기타재산관리청) ①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재산은 그 재산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 재무부, 농림부 기타 관계부처가 이를 관리하되 그 재산구분과 관리청이 확정될 때까지는 전조의 문화재관리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전항의 재산구분과 그 관리청의 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구항실재산처리위원회를 둔다.

③구항실재산처리위원회의 조직, 기능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1.10.17.]

제7조 (기타재산의 처분) ①구항실재산처리위원회는 제3조제4항의 기타 재산 중 율종재산으로서 국가에서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제4조의 구항족 및 교육기관이나 제3조의2제2항의 공공단체에 양여하거나 일반에게 공매할 것을 재무부장관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재산관리청에 건의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한 후 제4조제5항의 절차에 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항족에게 재산의 양도가 있었을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항족에 대한 매월의 생계비지급은 이를 중지한다.

[전문개정 1961.10.17.]

제8조 (구항족의 생계부조책임) 전조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의 구항족에 대한 생계부조의 책임은 구항실재산중 농경지와 임야를 관리하는 기타재산관리청이 이를 부담한다.

[전문개정 1961.10.17.]

제9조 삭제 <1961.10.17.>

제10조 삭제 <1961.10.17.>

제11조 (특별회계) 구항실재산의 세입세출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12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1.10.17.>

부 칙 <법률 제339호, 1954.9.23.>

제13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4조 구왕궁재산처분법은 폐지한다.

부 칙 <법률 제748호, 1961.10.17.>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재산의 관리청이 전부 확정된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구항실재산법은 폐지되고 그 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 단, 구항족에 대한 재산의 양여가 있을 때까지의 그 생계부조의 책임은 제8조의 기타재산관리청이 계속 이를 부담한다.

부 칙 <법률 제1050호, 1962.4.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B. 불법적으로 반출 편취 탈취 몰수된 구황실재산들 그리고 ‘구황실재산법’의 위헌성 여부

본 법 제1조와 제2조(목적과 국유의 대상)는 “경제적 기본권 중 재산권과 법 앞의 평등권”에 대해 위헌적이라 할 수 있겠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구 황족 삶의 터전이 되는 궁궐들과 재산들을 문화재화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었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되어 만들어진 법이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당시 권위적이며 위압적이었던 정부의 권력 하에서 국회의 입법행위는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국민이었던 구 황족들이 법 앞에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받는 일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아무리 당시 상황이 위협적이라 해도 법 시행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 구 황족들에게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3조 3항(“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의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본 법 제4조(생계비의 지급 등)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과 헌법 제2장,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헌법 제2장, 제14조(“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와 헌법 제2장, 제34조, 1항/2항(“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에 따라 헌법이 정하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자유권적 기본권 중 주거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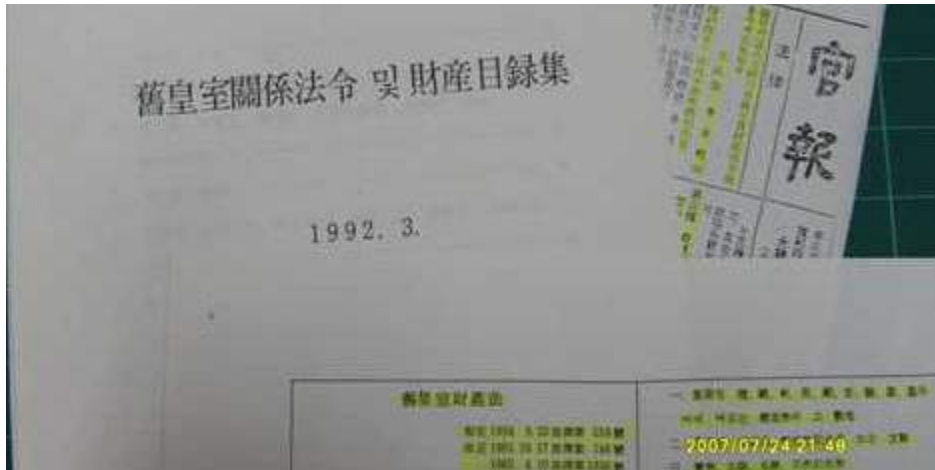
구황족 상속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는 본 법 제4조 2항은 민법 제1002조가 정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속하는 황족들을 포함하지 않고 덕혜옹주까지만 국한한 것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 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이 구황실 재산들이 그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고 있던 대한제국황실 황족들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조선왕실과 대한제국황실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훼파했던 친일역적매국노들의 편에 섰던 이승만정권에 의해 대부분 편법적이며 불법적으로 민간에 반출되거나 불하되었고 강제적으로 대한민국정부의 소유로 몰수되고 편취되고 만 것이었다.

더구나 미군정의 구황실관련 정보부족으로 이승만정권의 불법적인 구황실재산 탈취행위들은 통제 불능이었고 이승만정권은 광복이 되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영친왕을 비롯한 대한제국황족들의 환국을 방해하는 악행 또한 서슴치 않았다.

이렇게 구황실재산을 몰수하여 관리하던 구황실재산사무총국과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가 문화재관리국으로 개편되어 1968년 7월 24일 문화공보부 소속으로, 1989년 12

월 30일 문화부로, 1993년 3월 6일 문화체육부로, 1998년 2월 28일 문화관광부로, 1999년 5월 24일 문화재청으로, 그리고 2008년 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됐다.



<구황실재산법 관련 자료들. 사진제공-MBC>

특히 부정 반출된 황실 재산 중 ‘대표’ 격으로 거론되는 것은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위치한 배재대학 대지였다. 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모두 7만5000평의 땅이 이승만 대통령의 모교인 배재대학에 불과 평당 250환씩에 불하됐으며, 윤우경 전 구황실재산사무총국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했다.

그러나 윤 전 국장은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 이라고 항변했다. 윤 전 국장은 1968년 월간 ‘신동아’ 10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1958년으로 기억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배재대학에서 땅을 불하해달라고 하니 현장을 안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고 술회했다. 대통령의 모교를 위해 조선 황실의 죽은 왕자도 자리를 옮겨야 했다. 배재대학에 불하된 땅에는 왕자묘(王子墓)와 귀인묘(貴人墓)가 있었는데, 대학 건물 착공을 위해 경기 고양시 서삼릉으로 이장했다고 한다.

이 땅은 반환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최초이자 최후의 황실 재산이었다. 그러나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황실의 품으로 돌아오는 데 실패했다. 1964년 대법원은 이 토지의 불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구황실 재산을 민간에 불하할 때는 구황실 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경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조선 황실에 대해 연구해온 서울교대 안천 교수는 “그러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하된 황실 재산이 2000여 건에 달했기 때문에 천문학적 액수의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것을 우려한 박정희 대통령은 배재대학 땅 문제를 정치적으로 무마해버렸다” 고 말했다(Cf. 안천. 『황실학논총-일월오악도』, 1998).

황실재산소유권 관련 주요 사건

◆ 해원옹주 하남 토지소유권 소송

황족의 재산 관련 소송으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대한제국 황위 계승자로 주목받았던 해원옹주의 하남시 땅 반환소송이다. 2006년 9월 대한민국황족회는 대한제국 30대 황위 승계식을 열고 고종의 손녀이며 의친왕의 둘째 딸인 이해원(해원옹주, 현재 95세)씨를 여황으로 추대한 바 있다. 대한민국황족회는 대한제국 황실 복원을 위해 뜻을 같이한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다.

해원옹주는 2012년 3월 고종의 후손 15명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해원옹주 부친(양부)인 이기용씨 소유의 하남시 땅 1만2700㎡가 1965년 토지조사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부 소유로 넘어갔다”며 “정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황실 후손에게 땅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기용씨는 고종의 5촌조카로, 일제강점기에 황실 직계 호적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해원옹주를 포함해 의친왕의 자녀들이 이기용씨의 양자로 입적된 바 있다. 해원옹주 등은 조선총독부 기록에 해당 토지가 이기용씨 땅으로 나와 있으며, 1965년 토지조사과정에서 지목변경과 토지합병 등을 빌미로 부당하게 국유화됐으며 해원옹주를 포함한 이기용씨의 후손들이 이를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9월 “해당 토지는 적법하게 국유화됐으며, 민법상 취득시효가 지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1938년 일본 육군성이 포사격 연습장용으로 매입한 후 광복과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귀속됐다”고 밝혔다.

◆ 배재대학 부지 소송

현재 배재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땅 7만1950평은 대한제국 시절 대원군 형 흥인군의 5대손 이우인씨의 소유였으며, 광복 후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신탁돼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이를 모교인 배재학당에 평당 250원(당시 시세의 1/30 수준)이라는 헐값에 특혜 매각했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이우인씨는 1965년 국가를 상대로 하월곡동 토지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조사에 착수해 구황실재산사무총국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황실재산을 민간에 불하할 때는 구황실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는데, 이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이씨의 승소를 예상케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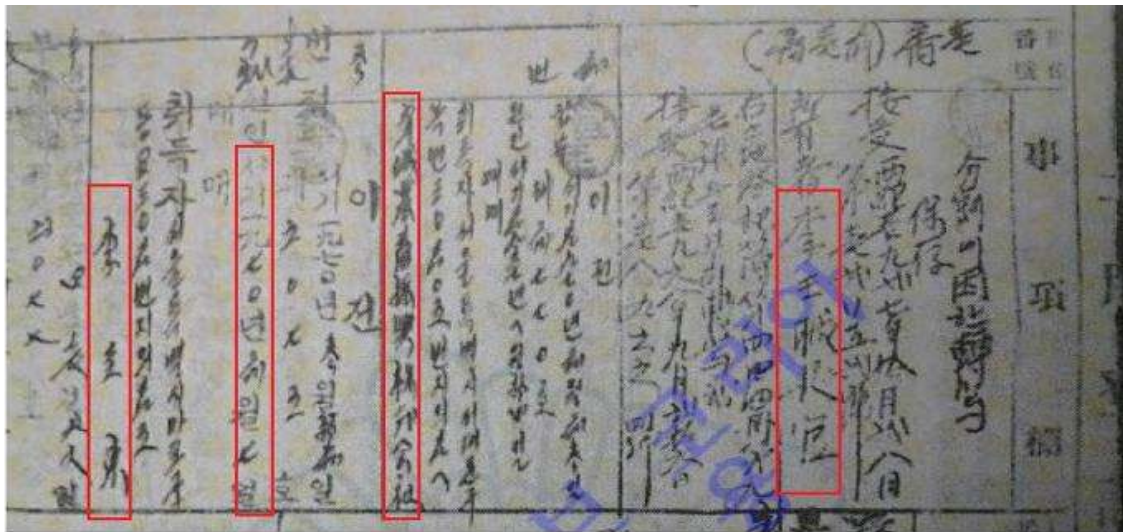
그러나 8년여의 지리한 소송 끝에 1973년 대법원은 “해당 토지는 이씨의 땅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다. 이에 대해 당시 언론인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천문학적 액수의 황실 재산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것을 우려해 정치적으로 무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숙명학원 경영권·재산권 반환 청원

영친왕의 둘째 아들인 이구씨는 1964년 숙명학원의 경영권을 주장하며 문교부에 청원을 제기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일본에 머물다 1963년 부모인 영친왕·이방자 여사와 함께 귀국한 이구씨는 본인이 숙명학원 설립자(순헌황귀비)의 직계 손자이며 황귀비의 재산으로 설립된 재단인 만큼 본인에게 재산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현 숙명학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이사진을 교체하고 본인이 선임하는 인사에 학교 경영권을 주어야 한다고 문교부와 국회 문공위에 청원했다. 문교부는 이에 행정권을 발동해 숙명학원 일부 이사진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고 이구씨가 지목하는 인물로 이사를 임명하는 등 직접 개입했다. 숙명학원의 기존 이사진과 이구씨 측 이사들, 국회 문공위와 문교부 관계자들은 1년 이상 서로 책임을 물으며 분규를 계속했고, 숙대의 준국립대학화 등 논의가 이어지다 1967년 결국 제3의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빼돌려진 황실 재산은 ‘투기’에도 활용됐다. 1964년 4월30일 ‘동아일보’는 ‘구황실재산 14만 평 무연고자에 불하 ... 주민들 진정으로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경기 양주군 구리면 매갈리와 사노리의 황실 재산인 동구릉 임야를 농림부가 연고가 없는 삼중건설(대표 신규식)에 개간 사업을 이유로 불하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삼중건설은 유령회사였다. 이 회사는 평당 5원에 불하받은 이 땅을 제삼자에게 평당 35원씩 받고 5만 평을 팔아치웠다. 나머지 9만 평은 불하 당시 ‘공작비’ 조달을 맡은 한 개인에게 법적 수속 없이 분배했다고 한다.

전두환의 장인 이규동은 국유재산 환수목록에서 누락된 황실재산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산 19-91번지 일대 약 56만평 현재 시가 2조원 이상의 땅을 매매서류를 위조하여 1970년 2월과 8월에 화성농축진흥주식회사(대표이사 전보건, 전두환 일가)를 거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해 황실재산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을 MBC는 2013년 8월 18일 뉴스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이왕직장관 명의로 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산 19-91번지 토지가
1970년 이규동 명의로 변경된 등기부등본. 자료제공-MBC>

이런 식으로 해서 황실 재산은 야금야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1963년 문화재 보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황실 재산의 처분이 단행되기 시작했을 무렵, 황실 토지재산의 총면적은 1억141만여 평이었다. 일제강점기 말 1억5519만여 평이었으니 광복 후 18년 동안 5378만여 평이 처분된 셈이다. ‘신동아’ (1968년 8월호)는 “자유당 시절의 재산 처분 경유를 짐작컨대 대개 규모가 큰 것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작은 것은 사무총국 단독으로 처분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썼다.

1963년 이래 영구보존재산 행정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의 처분량은 2817만1107평으로서 현재 남아 있는 구황실 소유의 토지재산은 총 7364만4000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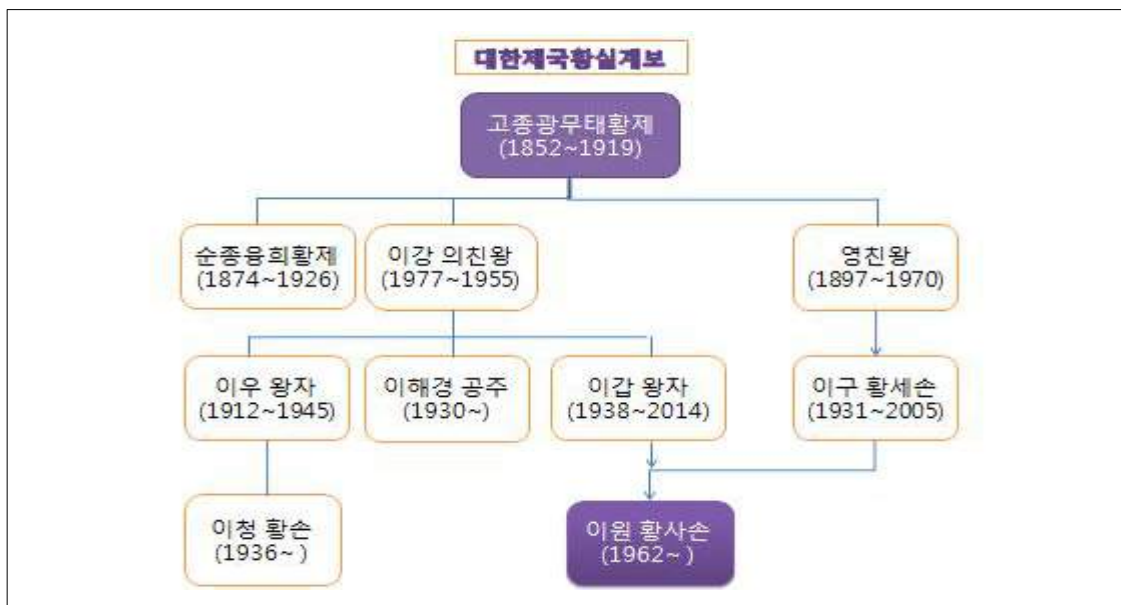
그런데 여기서 특히 문제 되는 것은 건국 이후 60년경까지 자유당 치하의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서 처분했다고 볼 수 있는 5378만평 중에는 서울 시내 도처에 산재해 있던 구황실 재산의

노란 자위라 할 수 있는 대지 1만399평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원남동, 와룡동, 정동, 명동, 원서동, 안국동, 청파동, 회현동, 제기동, 종암동, 휘경동, 성북동 등지에는 영구보존재산인 각 궁궐과 행정재산 이외에도 상당한 황실 소유의 대지가 있었다. 이 중 1만399평이 광복 후부터 4·19까지의 기간에 행방불명됐다(‘구황실재산’, ‘신동아’ 1968년 8월호).

뿔뿔이 흩어지고 남은 토지재산 7000여 평마저도 1989년 관리 주체가 문화재청에서 재정경제부로 넘어가면서 거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황실 재산은 서울에 있는 5개 궁과 전국 13개 능밖에 없고 신군부정권 시기 재경부로 이관된 7000여 평의 잡종재산은 민간에 매각되어 모두 처분되고 말았다.(Cf. ‘구황실관계법령 및 재산목록집’,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1992. 3.)

C. 역사 바로 세우기와 일제식민잔재 청산의 완성으로서의 구황실재산 복원과정

광복 후에 친일역적매국노들의 편에 섰던 이승만정권 하의 권력자들과 모리배들에 의해 구황실재산들은 불법적이며 편법적으로 탈취됐지만 그나마 남아 있던 황실 재산들이라도 구황실재산법 개정을 통해 현존하는 대한제국황실 황족들에 돌려주고 이를 정당하게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원(李源, 1962~) 황사손 저하. 고종황제의 증손으로 2005년 이구(李玖, 1931~2005) 황태손의 양자로 입적되어 대한제국황실 제5대 수장으로 재위(在位)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다시 말하면 개헌논의가 한창인 요즘 입헌군주제로의 개헌은 고사하더라도 21세기 역사바로세우기와 국가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대한민국 20대 국회가 가장 시급히 논의하고 실행해야 할 개헌의제들 중의 하나는 구황실재산법을 개정하여 부당하게 국고로 몰수 된 구황실재산들을 황족들에게 반환·복권하여 주거나 정확한 보상처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바로 세워야 하겠다.

고종황제의 내탕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된 상해임시정부에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가 있다고 역설한다면 대한제국의 법통과 구황실을 인정한 상해임시정부의 뿌리인 대한제국황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징적인 구심점으로서의 그 특수한 역사전통 문화유산적인 신분과 지위가 복원되어야 한다. 더구나 참혹했던 왜곡과 편견 속에서도 역사문화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대한제국황실에 대한 국가차원의 신분보장과 이에 따른 예우방식 역시 제도화 되어져야 한다.

고종황제의 비자금

조선의 왕에게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탕금’이 있었다. 태조 이성계는 고려 말 획득한 토지 등 개인 재산을 내수소라는 기구를 두어 별도로 관리토록 하고 거기서 마련한 자금을 마음대로 썼는데, 이것이 내탕금이다. 극심한 흉년이 들면 왕이 내탕금을 풀어 국민들을 먹여 살릴 정도로 내탕금의 규모는 컸다. 대한제국의 황제들도 마찬가지였다.

고종은 1909년 외교고문이며 특사였던 허머 헐버트에게 중국 상하이에 소재한 독일계 은행 덕화은행에 예치된 예금 51만 마르크(현재 가치 250억원)를 인출해 오라는 특명을 내린다. 그러나 중국에 도착한 헐버트는 예금을 인출해 줄 수 없다는 은행 측의 답을 들었고, 당시 예금은 이미 일본에 의해 사라진 상태였다. 헐버트는 수십 년 동안 이 자금의 행방을 찾아 헤맸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실제 해당 은행에 비치된 비자금은 그 두 배인 100만 마르크에 달했다는 문서가 나왔다.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정상수 연구교수는 최근 독일 외교부 정치문서보관소가 소장하고 있는 외교문서의 복사본을 판독한 결과, 고종이 1903~1906년 덕화은행(현재 도이체방크에 합병)에 맡긴 비자금은 100만 마르크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교수는 “일본이 1908년 독일정부와 합의해 51만 마르크를 가져간 사실은 확인되지만, 나머지의 행방은 묘연하다”고 말했다. 국내 사학자들은 “고종은 독립운동 지원을 위해 내탕금을 상당액 해외에 비치,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료제공-월간조선>

이런 복원-복권 과정을 통해 왜곡된 친일역적매국사관에 매몰된 현 대한민국사회는 국격 회복과 더불어 올바른 역사관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며 일제식민잔재들은 온전히 일소(一掃) 될 수 있게 된다.

이로서 현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에서 기인된 그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올바른 이념-윤리성 역시 표본화 하여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할 사회는 보다 더 정의롭고 보편타당한 실존적인 공간들로 일신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김을한.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2010.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4.

국회도서관. 『이왕가세습재산유서조(李王家世襲財産由緒調)』.

동아일보. “구황실재산관리총국을 전소...농후한 방화 혐의.” 1960.06.07.

동아일보. “구황실재산 14만 평 무연고자에 불하 ... 주민들 진정으로 수사.” 1964.04.30.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구황실관계법령 및 재산목록집』. 1992.03.

박찬중. 『구왕궁재산처분법의 위헌성 여부 분석』. 1998.

신동아. “구황실재산.” 1968.8.

안 천. 『황실학논총-일월오악도』, 1998

월간조선. “전국 곳곳에 숨어 있는 황실재산, 주인은 누구?.” 2013.02.

주간동아. “땅 한 평 안 남기고 공중분해.” 2006.10.24.

한겨레21. “황족의 품위가 말이 아니오.” 2006.08.24.

MBC. “구황실재산법은 위헌적이다.” 2007.07.26.

MBC. “이창석 오산땅...전씨 일가가 가로챈 나라 땅.” 2013.08.18.

구황실재산법의 위헌성 여부

- **본 법 제1조와 제2조(목적과 국유의 대상)는 “경제적 기본권 중 재산권과 법 앞의 평등권”에 대해 위헌적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3조 3항(“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의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본 법 제4조(생계비의 지급 등)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2장,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장, 제14조("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2장, 제34조, 1항/2항("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에서 정하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자유권적 기본권 중 주거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

- 구황족 상속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는
본 법 제4조 2항은 **민법 제1002조가 정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속하는 황족들을 포함하지
않고 덕혜옹주까지만 국한한 것 역시 헌법에 위배
된다.
- 구황실 재산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고 있던 대한제
국황실 **황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편법적이며 불**
법적으로 민간에 반출되거나 불하, 강제적으로 대한
민국정부의 소유로 **몰수·편취** 됨.

대한제국황실계보

고종광무태황제
(1852~1919)

순종융희황제
(1874~1926)

이강 의친왕
(1977~1955)

영친왕
(1897~1970)

이우 왕자
(1912~1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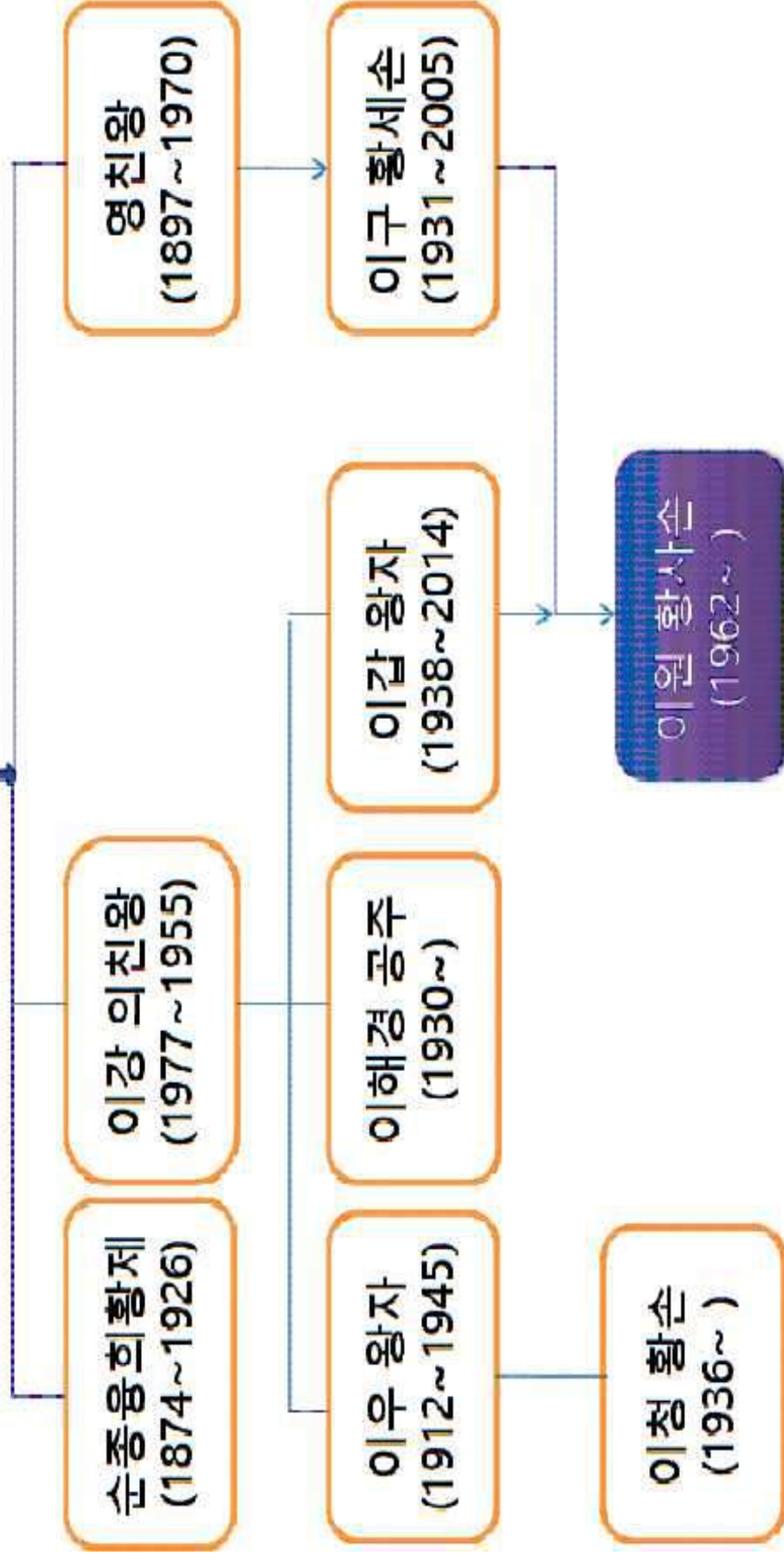
이해경 공주
(1930~)

이갑 왕자
(1938~2014)

이구 황세손
(1931~2005)

이청 황손
(1936~)

이원 황사손
(1962~)





●주최 | 민주연구원

●주관 |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재)문화유산회복재단